-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7. 10. 17.(화) 15:00
- 장 소: 충남연구원 중회의실(1층)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7. 10. 17.(**화**) 15:00 ~ 17:00
- **장　　소**: **충남연구원 중회의실**(1층)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진 행 흐 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5:00	15: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정책지원팀장**
15:05	15: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김종필 부위원장
			< 토 론 회 >	**※ 좌장: 김종필 부위원장**
15:10	16:10	60′	**주제 발표**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 한국경제의 미래, 청년고용과 대학개혁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이주의 현황과 과제 ‣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분석과 시사점	
16:10	16:50	40′	**지 정 토 론** ‣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김우영/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박준형/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 김현철/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노사협력팀장	토론자 전체
16:50	17:00	10′	정 리 및 폐 회	좌장(김종필 부위원장)

목 차

■ 주제발표

☞ **한국경제의 미래, 청년고용과 대학개혁** …… 1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 경제연구부 교수)

☞ **노동이주의 현황과 과제** …… 25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충남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분석과 시사점** …… 45
신동호(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청년 및 고령화 통계와 충남 지속가능 발전에의 시사점** … 97
김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충남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 103
김우영(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107
-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
박준형(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 **충남의 청년실업과 일자리정책** …… 113
김현철(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노사협력팀장)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의 정 토 론 회

주제발표 1

한국경제의 미래, 청년고용과 대학개혁

우 천 식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 경제연구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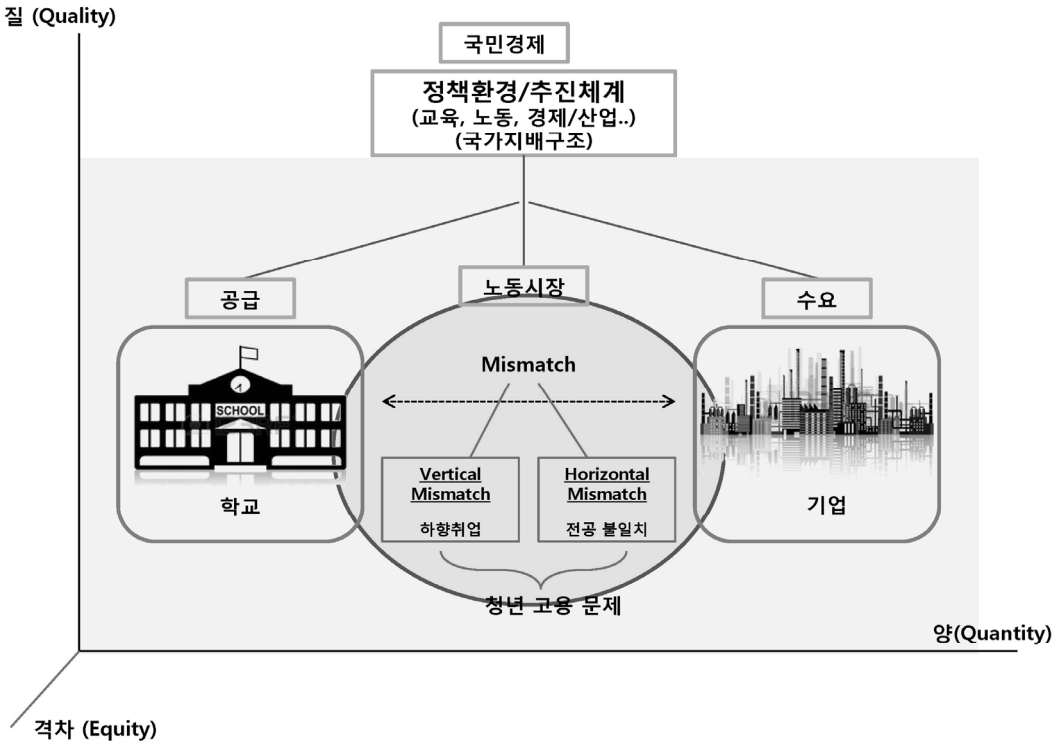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미래, 청년고용과 대학개혁

2017- 10-17

우천식 (KDI, 산업서비스 경제연구부)
cswoo@kdi.re.kr

Korea's Leading Think Tank KDI

(청년)고용문제의 구조 도해



I. 한국경제의 현재와 중단기 전망

과거 괄목한 만한 성과: 위기극복 등 그러나 현재 ....

- 무거운 현실, 생존의 중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팽배
- **성장, 분배, 사회통합, 후생**(well-being) 모든 면에서 커다란 도전과제에 직면
  - 불안정한 저성장기조, 고용. 소득의 양극화 등 문제 심화
  -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 이념/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 심화
    -> 사회통합 기반 침식
  - 평균 소득수준은 거의 30,000불 수준으로 높아졌음에도 개인의 행복감 (삶의 질)은 대체적으로 저조
    - 환경, 여가, 건강, 박탈/소외감, 불안감.
  - 한반도/동북아 변수

신정부 여건

■ 국민의 거대한 '전환' 열망에 의해 출범, 그러나 미증유의 어려움 직면

국민의 변화욕구

- 권위주의 및 특권주의 타파, 새로운 정치 및 공정한 경제사회 실현
- 구조적인 일상생활의 불안, 낮은 삶의 질 문제 해소
- 선진한국을 위한 새로운 기회, 희망, 확신의 창출

대내적 어려움

- 저성장-양극화 심화
- 저출산-고령사회 위협의 가시화
- 사회갈등 심화, 사회통합 기반 위협

북핵 문제
(외교안보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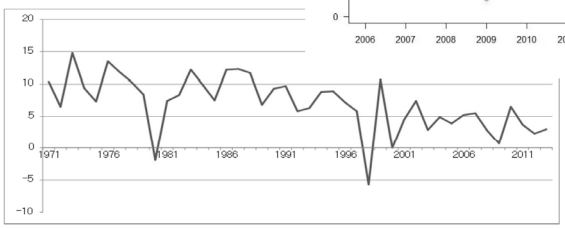
대외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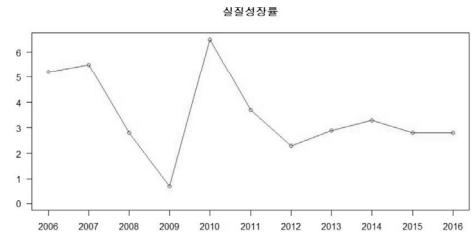
- 새로운 글로벌 패권경쟁 구도
- 세계경제의 침체 위기
- 4차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지각변동

- 가계: 일자리難, 주거難, 부채難 …
- 기업: 인재難, 경영難(한계기업 + 주력기업), 기술難, 신뢰難(재벌 등)
- 정부: 정책難, 재원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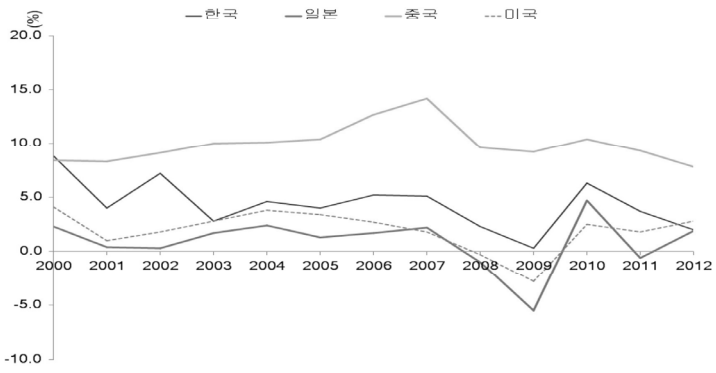
성장 문제

➢ **경제성장률 추이 (1971~2014)**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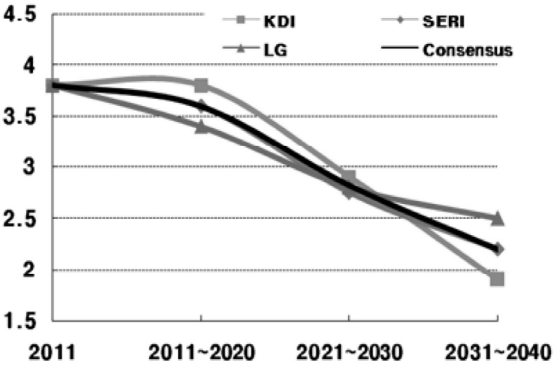
잠재성장률(성장회계)

- 2020년 이후 취업자증가율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 상승에 따른 자본스톡 증가세 둔화 등 고령화 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
- "생산성 증가"가 관건이나 전망 불투명

* 2030년대에는 KDI가 2%이하로 제시, 삼성과 LG는 2% 초중반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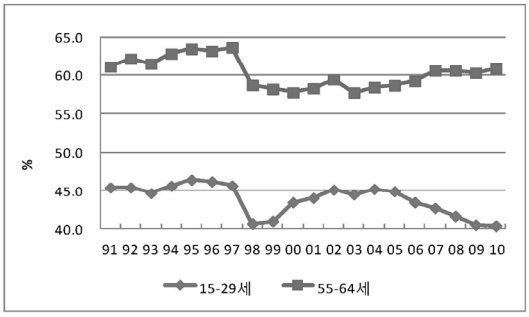
기관별 잠재성장률 전망(Baseline)

	KDI	삼성硏	LG硏
2011	3.8	-	-
2011-2020	3.8	3.6	3.4
2021-2030	2.9	2.8	2.8
2031-2040	1.9	2.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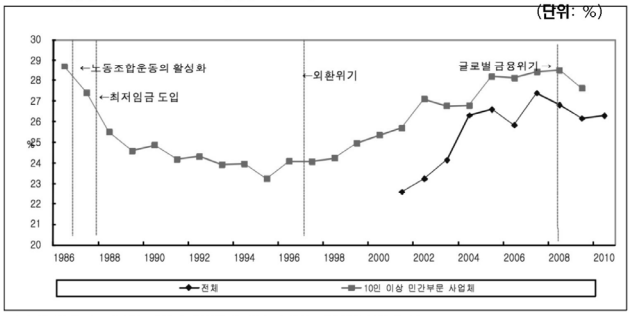
고용-분배 문제 (소득-고용의 양극화)

• 청년층과 고연령층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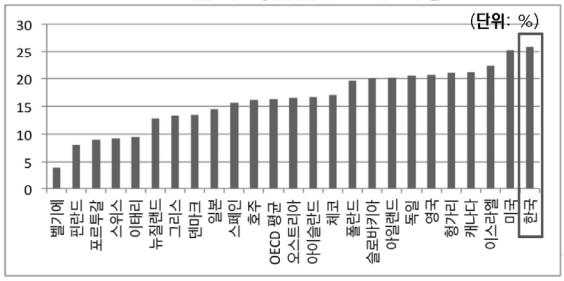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198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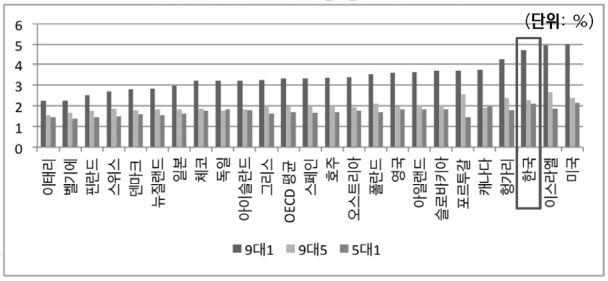
주: "전체" 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10인 이상" 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고용노동부)에서 계산된 것임. 시간당 임금 기준.
자료: 이병희(2011)

• OECD 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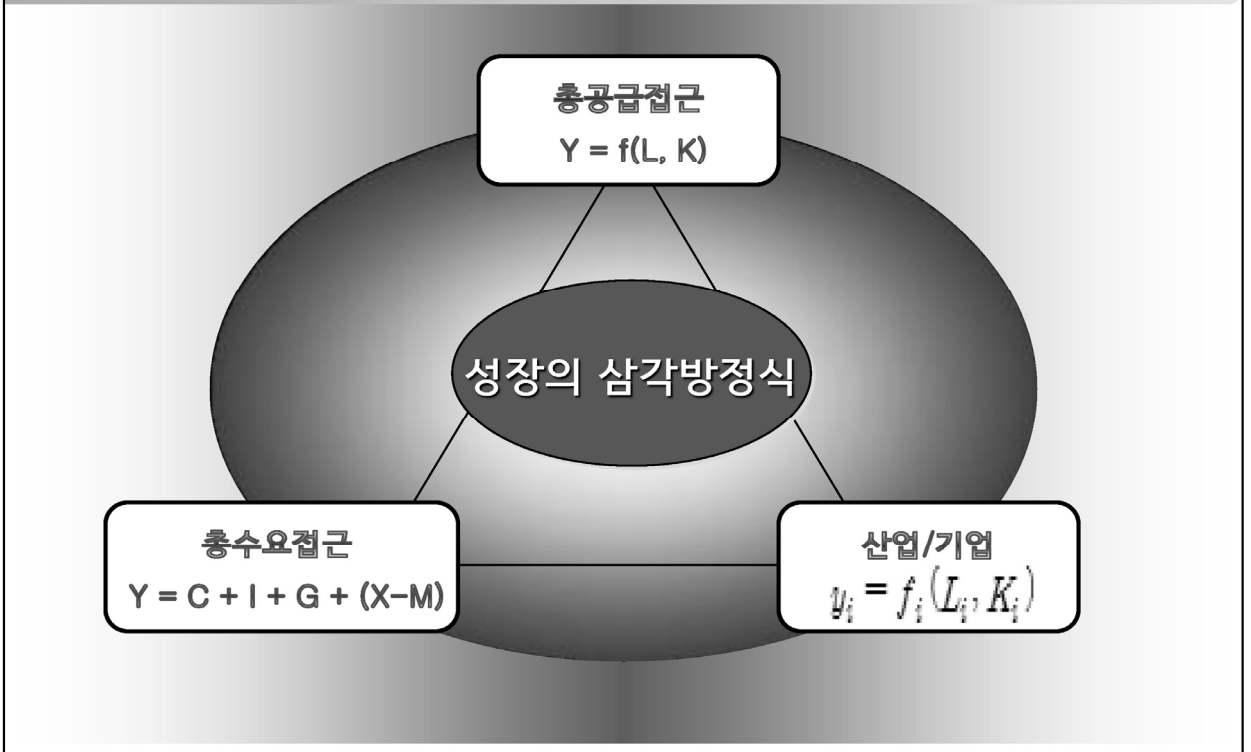
자료: OECD(2012)

• OECD 국가들의 임금불평등도(2010)



자료: OECD(2012)

경제 (노동시장 여건) 전망



- 총수요 : 소비, 투자, 수출
  - 구조적 늪에 빠진 hard-trapped 상태
    - ⇨ 재정, 통화 정책, 기타 경기부양 등으로 대응, 해소하기 어려움

소 비

- **임금소득은 저조 + 불확실(Flow 문제)**
- **막중한 가계부채(Stock 문제)**
  - 저소득층은 물론 다수 중위소득 계층은 주택가격 상승이 없는 한 부채 Trap을 벗어날 능력이 없을수도 있음

투 자

- **설비투자 부진**
  - 주력기업의 경쟁력/사업구조 한계 : 기술 + 소프트 전략 경영자산
- **건설투자 포화상태 : 주택 및 SOC 전반**
  - 4대강 사업 및 지난 10여년 간 건설투자 Drive

수 출

- **저임금-후발산업국의 부상(BIRCs+기타 NIEs)으로 지속적인 비용우위 잠식**
- **전통적인 경쟁력의 한계극복 – 새로운 돌파구 난망**
  - 최근 중동 등을 대상으로 한 Plant 수출도 한계

>> 산업/기업: 중화학공업-대기업 견인 기관차형 모형의 한계

■ 과거 산업경제시대의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격" 단계에서 '선도경합' 단계에 진입하는 혁혁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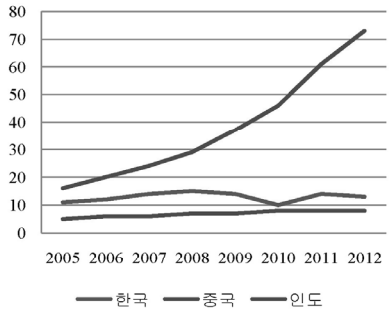
● 주력 제조업 부문의 선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 일부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름 (글로벌 Brand의 등장).

■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기업이 계속 등장하길 기대하기 곤란한 현실

● 제조업 부문 대다수 선도 대기업은 원숙기 국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 곤란 (개도국 추격, 비용절감형 기술혁신의 포화점 등)
  - 주력기업은 이미 고령화 (2012년 10대 산업 1위 기업의 평균 연령 54세, 상위 10대 수출품목 생산기업의 평균 연령 23세)

●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 부문 등에서 글로벌 기업, 신수종산업의 출현 기대 곤란
  - 2012년 Fortune지 선정 글로벌 100대 성장기업 중 한국기업은 없음 (미국 80, 캐나다 9, 중국 6 등)

Fortune 500대 기업내 자국기업



주력 대기업

- 한국경제의 엔진 / 동력(locomotive)

vs

- 기업생태계의 교란요인/암초 (극복대상)

COVER STORY 막 오른 '미래 전쟁'

'위기의 서막'…30대 그룹 절반 사라질 것

향후 5년 고강도 구조조정 이어져, 위기 속 기회 잡는 '미래 준비' 필요

2015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는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까.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기술·경제·환경·법·정치·제도·종교 등의 국내외 변화들 속에서 어떤 기업이 생존하고 어떤 기업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될까. 필자는 그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위기 시작을 예측했고, 2015년 들어서는 현대차그룹의 위기가 4~5년 안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들의 미래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한국과 세계의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2015년 올미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한 해가 될 것이다는 게 필자의 전망이다. 물개는 앞으로 5년, 길게는 한국의 미래 30년 방향을 가늠하게 할 '방향키'로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올 한 해는 다가오는 위기를 흡수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할 결정적 1년이 될 것이다. 옛말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꿰게 된다는 말이 있다. 개인·기업·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제 주체가 2015년 한 해를 잘못 경영하면 앞으로 30년의 미래가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가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어나 기대는 기대일 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글로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5년 현재 절반 정도 지났을 뿐이다. 지난 절반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의 위기였다. 앞으로 남은 절반은 신흥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삼국에 들이닥칠 것이다. 지난 5년이 이웃집의 위기였다면 앞으로의 5년은 우리 집의 위기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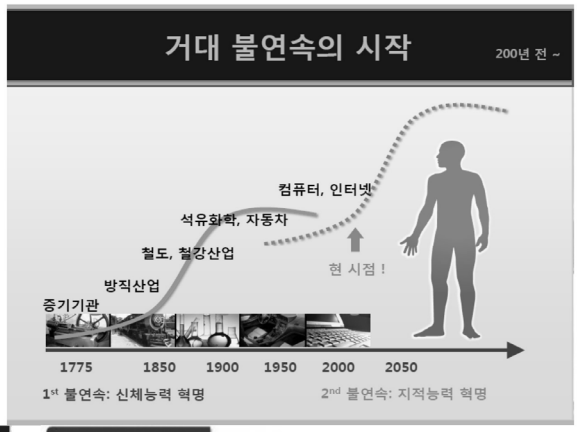
한국 기업은 앞으로 10~15년 이내에 두 번의 폭풍우를 지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30대 그룹 중 절반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라진 자리는 다시 등장한 15개의 대기업이 대체할 것이다. 탈락하는 기업에는 위기이지만 새로 진입하는 기업에는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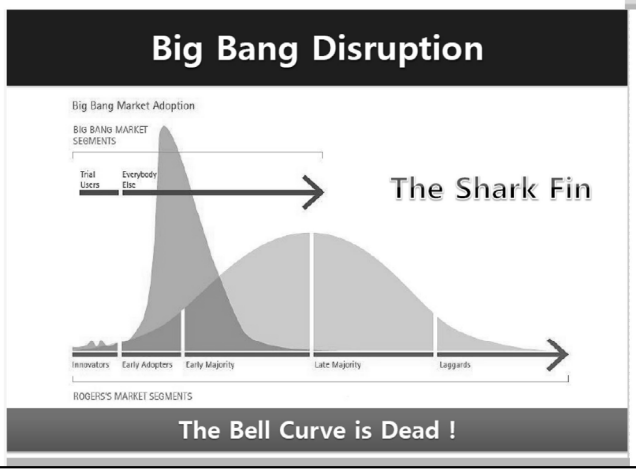
한국 기업의 위기, 아시아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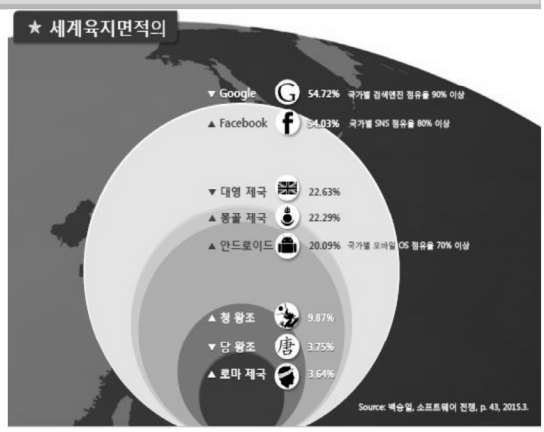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30대 그룹 중 17개가 순위에서 사라졌다.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됐고, 기대 은행들도 무너졌다. 대마불사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났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선진국 기업을 눈앞에 두고 1970년 이후 가장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난파선 신세가 됐다. 역대 최고의 수출 규모와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대의 매출과 흑자, 굴 세계 일류 그룹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찬사를 받던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튼튼한 외화보유액을 자랑하며 위기에 빠진 동남아 국가에 달러를 지원하던 처만실은 간데없이 IMF에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위기는 2009년 이후에도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시아가 아닌 세계경제의 한복판인 미국에서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신흥국은 지난 5년간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이나 원자재 수출 국가다. 주요 수출 지역은 유럽과 미국이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유럽은

- 기술경제사회 환경의 지각변동
  - 4차산업혁명: tectonic change/volcanic eruption
  - BNIC 융합기술: 완성 단계
- 세계화, 지역화의 완성
- Global Business Landscape의 전면 재편; 가속화
  - 전통적 MNEs -> New "제국기업"
  - 기업 생장주기의 단축







종합전망 – 기준 전망 (As-is)

- 민생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정책적 대응역량에 대한 믿음 희석
  => 미래에 대한 희망 소진, 사회전반의 불안/불만 누적 위험성

- 중장기적으로도 현 경제구조 – 정책기조 하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 향상이나 잠재성장율 회복, 분배 및 고용구조의 개선 (경제·산업·고용·소득의 양극화 둔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
  - 고용(일자리)의 양, 질, 격차 모든 면에서 전면적 위기 국면

- "저성장속의 양극화[지역·기업간·소득계층간 등]"
  => "저성장속의 동반침체"로의 국면전환 위험성 상존
  - 다수 대기업의 침체 (제조업 및 서비스),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 광역도시권의 침체 등 새로운 국면 예상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기타 지방은 지방대로)
  - 확장적 정책으로 조급한 경기회복과 고식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다가는 그마나의 경제 복원력을 훼손하고 일본형 장기침체를 야기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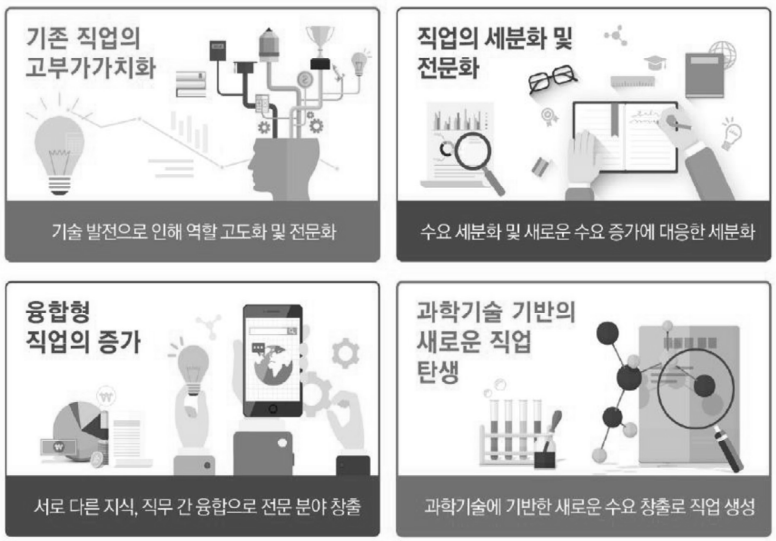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충격

미래의 직업 변화 트렌드

-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직업 변화의 4대 트렌드**

➡ 발전, 분할, 연결 과정을 통한 직업의 특성 변화 , 그리고 새로운 직업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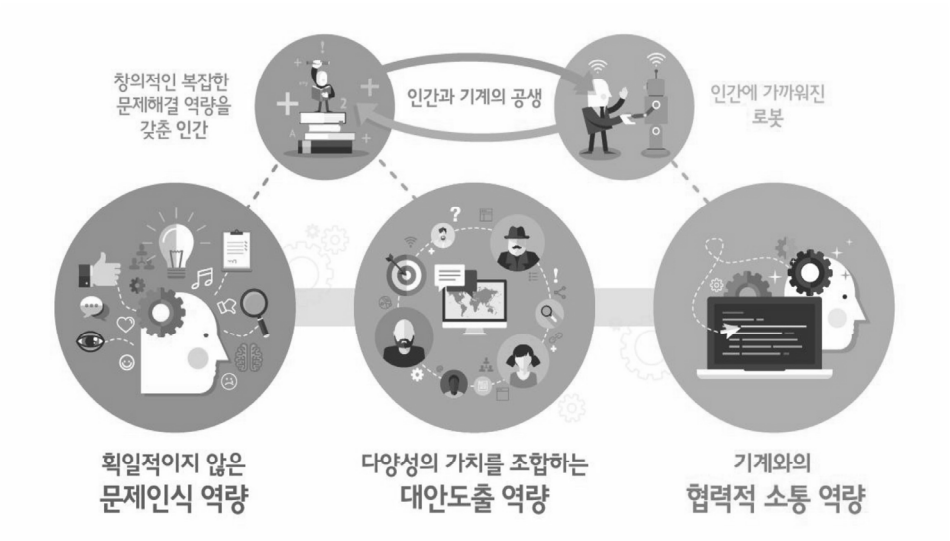
: 인간의 역할 변화를 동반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제시



미래사회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필요역량

■ **3대 미래역량**

➡ 인간 고유의 문제인식과 대안도출을 통해 '창의적이면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더불어 기계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공생할 수 있는 역량



그러나 현실적으로...

4차산업혁명 낙오땐 일자리 164만개 날린다

매경·딜로이트컨설팅 2025년 고용 분석

정부·기업 대응하기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 '극과 극'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따라 국내 일자리가 최대 164만개 감소하거나 최대 68만개 증가할 것이란 '극과 극'의 전망이 나왔다. 자동화로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란 염려가 높지만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면 오히려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 기치를 내걸고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일자리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매일경제신문과 딜로이트컨설팅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래 신산업(신상품·서비스) 정착 정도와 AI·로봇 등에 의한 생산 자동화 진행 속도에 따라선 202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최대 68만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A3면

딜로이트컨설팅은 신산업 정착 정도와 생산 자동화 진행 속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차세대 반도체 등 신산업이 정부와 기업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2020년 형성되기 시작해 2025년 안착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자동화 진행 속도가 완만히 진행될 경우 미래형 자동차, 첨단 소프트웨어, 생활안전 등 산업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전망

신산업 조기 정착 + 단계적 자동화	68만개
신산업 지연 + 단계적 자동화	33만개
신산업 조기 정착 + 전면적 자동화	130만개
신산업 지연 + 전면적 자동화	164만개

*자료=딜로이트컨설팅

서 2025년 기준 6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조기에 육성하지 못한 채 자동화만 급격히 진행돼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빠르게 대체하는 것이다. 이때 164만개 일자리가 증발한다. 유통·물류가 55만개 감소해 직격탄을 맞는 것을 비롯해 기계, 조선, 섬유 등 제조업은 물론 교육, 금융, 행정 등 서비스산업까지 총체적인 고용 절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것이란 전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일자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영향 연구는 있었지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전체 산업별 일자리 증감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재만·나현준 기자

생활안전·SW·콘텐츠 직업 뜨고 교육·행정·금융

〈보안·재난 전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에 따라 일자리가 최대 164만개 감소하거나 최대 68만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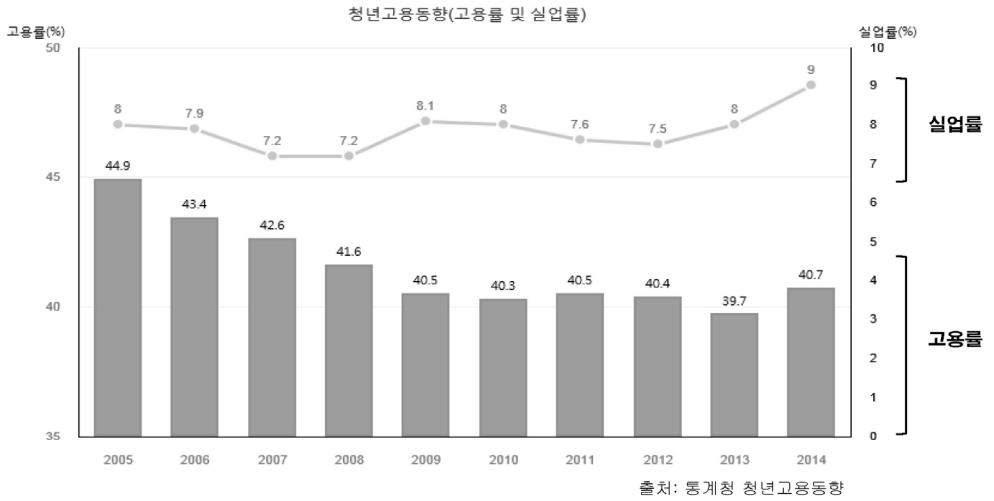
II. 청년고용 문제 전반

청년 고용 현황 주요 통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가능인구	9,843	9,855	9,822	9,780	9,705	9,589	9,517	9,548	9,503	9,486
경제활동인구	4,634	4,530	4,398	4,304	4,254	4,199	4,156	4,124	4,255	4,335
(경제활동참가율)	47.1	46	44.8	44	43.8	43.8	43.7	43.2	44.8	45.7
실업자	364	328	315	347	340	320	313	331	385	397
(실업률)	**7.9**	**7.2**	**7.2**	**8.1**	**8**	**7.6**	**7.5**	**8**	**9**	**9.2**
고용률	**43.4**	**42.6**	**41.6**	**40.5**	**40.3**	**40.5**	**40.4**	**39.7**	**40.7**	**41.5**
취업자	4,270	4,202	4,084	3,957	3,914	3,879	3,843	3,793	3,870	3,938

출처: 통계청 청년고용동향

청년 고용 현황 주요 통계



출처: 통계청 청년고용동향

(실업률) 2015년 4월 10.2%로 2000년 이후 4월 기준 최고 수준
-구조적·누적적 요인으로 높은 청년실업률이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

(고용률) 2013년 39.7%까지 하락하다가 2014년 40.7%로 다소 개선

노동부 청년실업 주요대책

-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2015년 청년 12,000명 해외진출 지원
- 특성화고 해외취업반 운영, K-Move 지역 거점대학 육성

청년실업대책	연도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2013년 10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2013년 1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년 4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2014년 11월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2014년 12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2015년 6월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2015년 7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2015년 11월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정책동향

주요정책방향:

1.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속 추진

- 정년연장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청년고용 확대 여건 조성
-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 간 격차를 줄여 미스매치 최소화

2. 일자리 수요 확대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노력과 청년 신규고용을 연결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이행률을 높여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을 활성화 → 청년층 선망 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촉진(보건·의료, 금융, 소프트웨어)
- 청년 및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고용 정책 동향

3. 청년의 눈높이에서 전달체계 개편 및 현안대책 마련

- 대학 중심의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구축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대학의 청년취업·해외취업 지원 기능을 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일원화

- 청년의 일 경험 내실화 및 확대

  - 일 경험 목적에 따라 인턴 등 직무경험 중심으로 재학생 일 경험 기회 확대· 내실화(취업 연계형) 근로조건 보호 강화 및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 지원

  - 인문계 전공자의 기술교육 강화(청년취업아카데미 개편)

  최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인력부족을 겪는 SW 등 기술 관련 직종에 대한 인문계 특화 교육훈련과정을 마련·지원

4. 청년고용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청년 일자리 사업의 체감도 및 성과 제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 청년일자리 정책·사업 평가 및 개편

출처: 고용노동부 '최근 청년고용 동향 및 정책 추진 방향 2015'

"대학 중심" 청년고용정책

- 전문대학/대학 :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

  - 전문대학생이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 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용을 위한 공간,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민간 컨설턴트를 채용 배치하여 대학 청년고용센터 운영

III. 대학발전과 인적자원 고도화

인적자원 고도화의 현재와 도전과제

KDI

▪ **성공적인 한국형 교육·인력 발전모형 ⇒ 성숙기 산업사회로의 국가발전 성과**

- 산업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 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동시에 달성
- 초·중등에 이어 대학 및 유아 · 보육 부문까지의 양적 확장, 마무리 단계
- '양적 풍요 속의 질적 빈곤' , 사교육비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수범 사례

▪ **본격적인 '질적 심화' 로의 이행, '한국형 교육·인재혁명의 완성' 과제 직면**

- '지식기반, 창조경제' 시대의 급속대두 ⇒ 개인/집단 차원의 '비정형적 · 창의적 능력' 배양/확충
  노동시장 유동성 증대, 저출산 · 고령화의 급진전 ⇒ 주력 근로계층의 역량 강화, 생산인력기반 확충
- 1) 미완/미결 상태의 교육개혁 과제 완료, 2) 평생교육 등 인력정책상의 사각지대 해소
  3)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한국형 교육·인력 발전비전과 모형 필요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 인력모형의 패러다임적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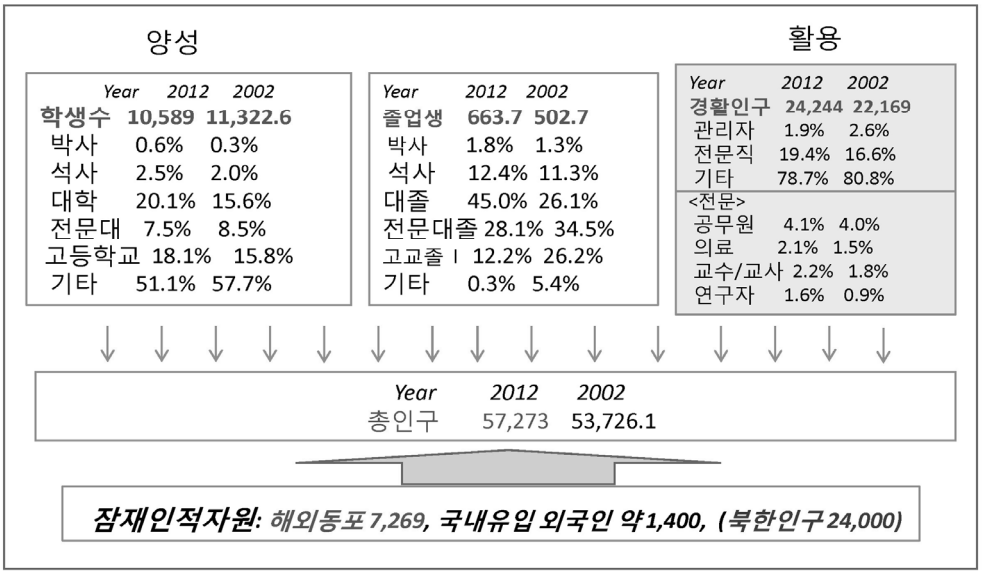
- "내국인, 학령기학생" 중심의 폐쇄적 ·학교중심형" → 글로벌연계형, 생애전주기형 학습모형
- 정형적 교육서비스의 국가일체형(중앙집권) 대량공급 → 분권/분산 · 네트워크 · 개방형 교육체제

❖ 단위기관/현장 중심 혁신 (place-based innovation), 지역발전과 긴밀히 연계된 대학발전·인재양성을 위한 심층적 제도개혁(투자확충·효율화), 이를 위한 개혁역량(설계 및 실천) 확충 필요

(참고) 교육 – 인적자원: landscape

인적자원의 양성•활용:

- 저량(Stock) vs. 유량(Flow)
- 양(quantity)과 질(quality); 평균(average)과 분포(distribution)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1. 양적 풍요(opulence)속의 질적 빈곤(paucity)

- 인적자원의 국제비교

평가명	지표명	'14 순위
IMD	교육체계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29위/60개국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충분히 강조되는지 여부	33위/60개국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53위/60개국
	경영학 교육의 적합성	47위/60개국
	언어 능력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31위/60개국
WEF	수학・과학교육의 질	34위/144개국
	경영대학(원)의 질	73위/144개국
	교육시스템의 질	73위/144개국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성	10위/144개국
	전문연구, 훈련서비스 이용가능성	36위/144개국
	직원 훈련의 정도	53위/144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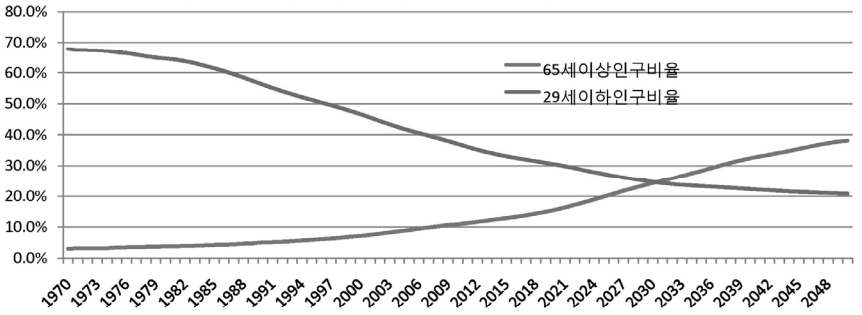
자료: IMD(2014), WEF(2014).

2. 그러나, 이제는 양(quantity)도 문제 – 학생부족 + 인력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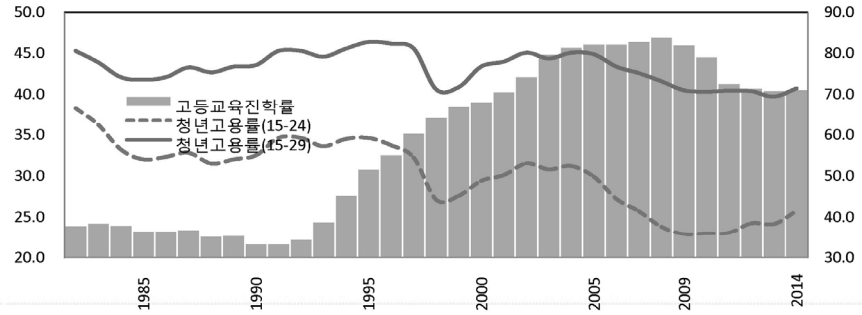
KDI

인구구조와 청년 취업난

➢ 인구구조변화 (197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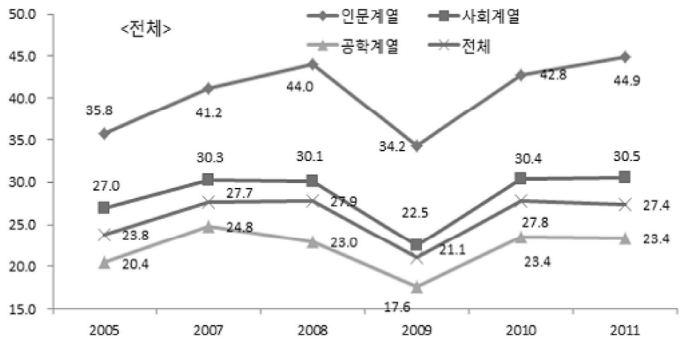
➢ 청년 진학과 취업 (1970~2050)



3. 인력수급 불일치(Skills Mismatch)

- 전반적인 고학력화 => 산업수요에 대비한 청년층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문제 지속
  - ➢ 수직적 불일치(개인의 학력/역량 수준)와 수평적 불일치 (전공/분야) 문제 혼재
- 마이스터고의 도입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업고 등 직업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침체 상태
-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 문제 속에, 대졸자(특히 인문계)의 취업 문제 심화
  - * 하향취업비율 (%) : 인문계 27.5 > 사회계 23.9 > 공학계 15.9 (전체 21.5) (고용율도 유사한 문제]

<대졸자 전공 대분류별 전공불일치>



- 대학원 급팽창, 고급인력 직업다변화 ⇒ 석·박사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도 심각
  - * 과기분야 박사인력의 60%가 학위가 필요없는 직종 종사 (중등교사, 사무직, 영업직 등)

4. 숙련퇴화 문제: “학교 이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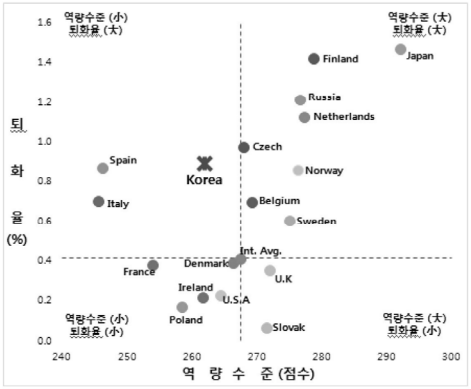
KDI

▪ 정규교육의 질적 문제 + 노동시장 진입 후 투자 빈약 (투자환경 및 수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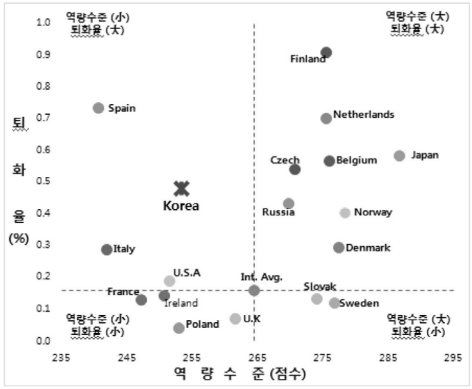
⇒ [OECD PIAAC 조사] 성인의 직무능력 수준 저조 + 높은 숙련퇴화율 (잠정 분석결과)

1-3.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숙련퇴화

❑ 언어능력 및 퇴화율 국제비교 (35세-65세 기준)



❑ 수리능력 및 퇴화율 국제비교 (35세-65세 기준)



1) 사회적, 기술진보에 의한 진부화가 아닌 인지적 숙련 혹은 인지적 역량의 퇴화로 PIAAC 조사의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점수를 이용

2) 추정식은 $\ln C_i = \ln W + \beta_k[(1-\delta)^t(S_i)] + \beta_X X_i + u_i$ (비선형 모형 추정) ; 반가운(2015)의 진행중 연구 결과 인용

11

대응과제 - 고등교육 부문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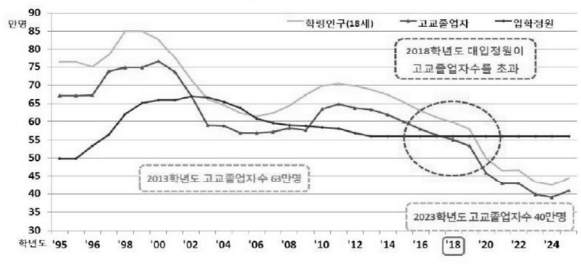
정책성과

-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경쟁력 향상 (국제적 지위의 대학 등장)
-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체계화 (평가체계 포함)
- 장학금 규모 증대를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 노력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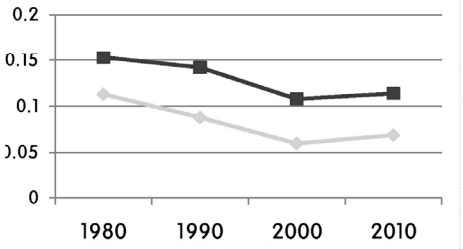
문제점

- 등록금 수준은 높으나 학생지원체제는 취약
-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측면의 교육투자 성과는 정체
  - ➢ 입학자원 감축에 따른 중하위권 대학의 경영난 심각
  - ➢ 다수 대학의 부실화 위험 높으나 구조조정 난항 (국회 법개정의 한계 등)

<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 초과인원 추이 >



고등교육투자의 내부수익율(사회적 수익율)



: 김미란 외(2012), 직업교육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KDI

정책 방향

- 대학의 특성화 • 전문화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구조개혁 과제 지속
-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함께 종합 재정지원 방안 수립

  ⇒ 지역화•세계화 •정보화를 3대 전략축으로 중장기 구조고도화 추진

정책 과제

- 평가에 의한 정원조정 등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 우수대학의 자율성 강화, 지역거점형 대학에 투자 집중,

  지역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광역/기초지차제의 적극적 역할)

  - 사립대학은'정부지원형'과 '자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국내 최선도 지위의 사립대학은 등록금·정원에 대한 전폭적 규제완화(자율형사립화)

    ⇒ 민간재원흡수, 국제화, 정보화 등에 관한 내부역량의 최대 발현 유도

  - 국공립대학, 여타 선도사립대학은 지역거점기관화: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담당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2014.7 시행)'과 연계 추진

- 연구수월성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체계 개편
- 장학금 중심의 재정지원 구조 ⇒ 학자금 대출 시장의 정비/활성화

대학의 지역화 –

KDI

대학발전 · 인재양성(고용안정, 산업경쟁력 확충)의 요체

- **향후 우리나라 대학-지역-국가 발전의 최대 전략요인**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 해결은 물론)
  - **수도권, 비수도권(지방) 모두에 해당**

- **지향점: 지역을 단위로 한 대학-지자체(기초, 광역)-기업-지역사회" 의 융합발전 모형 실현**
  - **지역발전의 핵심축, 지자체의 핵심파트너로서 대학의 선도적 역할 필요**
  - **'연구-교육/인재양성-리더쉽' 모든 면에서 국가,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역사회, 지역정부에 대한 책임지는 대학의 모습 필요**

- **중앙정부 주도의 산학협력 등 각종 지역산업/혁신기반/인재 관련 정책에의 참여로는 부족 =>**
  - **지역지향형 대학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 **국가 대학행정체제 차원에서 대학과 지역정부 간의 보다 명쾌하고 책임성 있는 관계설정 필요**
  -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제한적 조치 재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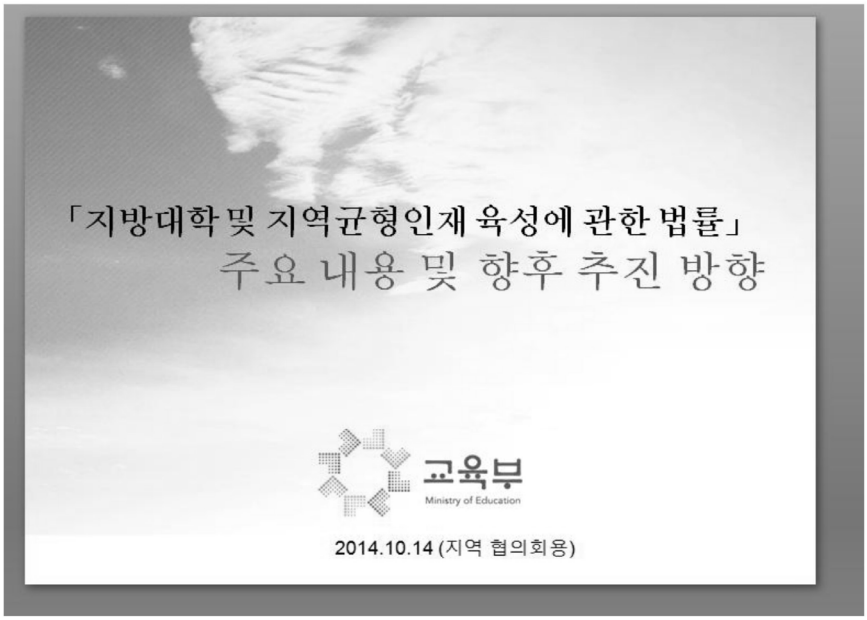
□ **고등교육 전반의 행재정제도**: 중앙집중적인 정책추진체계에다가, 부처간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에 문제 요인 잠복

1. 관련 **사업의 연계성 미흡**: 국가전체의 HRD 및 R&D 관련 예산규모와 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간의 사업 연계성이 미흡하여 비효율 요인 잠복

2. **중앙집중적 구도**: 대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미하며 재정지원도 지방정부나 지방교육행정기구에의 이전 없이 중앙에서 직접 집행하는 구조임. 대부분의 과제가 중앙정부 주도로 기획.평가.관리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과 수요반영이 구조적으로 곤란함.

   ▪ 지역정부가 지역소재 대학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과 능력이 원천적으로 제약(투자재원 확충과 지역내 모니터링에 의한 효율성 확보에 주요한 걸림돌)

대학 지역화의 중대한 돌파구?



평생교육 – 대학발전의 전략부문

KDI

현황과 문제점

- **2000년대 중반 이후 평생학습 지원체제 강화 ⇒ 참여율 빠르게 확대**
  - *** '08년 25.6% → '12년 36.5%**
- **그러나 아직 국가정책의 변방; 일반 소양·문화활동 중심의 한계적 성격**
  - ➢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전업학생 → 전업직장인'이라는 이분적 구조 지배적
  - *** OECD PIACC 결과: 한국의 성인역량 수준 저조 + 역량 퇴화율은 높음**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등 민간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장치 미흡**
  - ➢ 재정투자 절대적으로 빈약(기본적으로 개인부담) => **경제·사회적 격차의 발생/확대* 정부예산의 1.2% (교육부 예산의 0.1%) (2013년 현재)**
  - ➢ 경직적, 파편적, 공급자 중심의 집행체계 =>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
    - (교육부) 평생교육 정책과 복지·노동·산업 등 인접 정책부문과의 연계성 취약
  - ➢ 민간공급기관(학원)까지를 포괄할 국가자격제도, 통계 등 정책인프라의 취약

평생교육 부문

KDI

정책 방향

- **주력 근로계층은 물론 고령인력의 사회경제적 참여•기여를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계의 획기적 강화**
- **재정투자 확대 ⇔ 기존 공급역량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혁**
- **대학의 평생학습지원체제 강화; 사회전반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민간시장 형성 촉진 (민간재원 흡수) 및 정책인프라의 정비•강화**

정책 과제

- **재원조달, 거버넌스, 인프라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 투자우선순위와 장단기전략을 구분하여 단계적 으로 추진**
  - ➢ (중단기)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강화 프로그램; 평생학습계좌제 재구축
  - ➢ (중장기)평생학습재원 마련(소득연동형 대출, 고용보험기금 등), 법제도적 지원 및 연계 시스템, 수평적·수직적 지배구조 재설계,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통계기반, 민간공급기관 포함 인증제도 정비 등)

국민 생활 속의 창조적 학습활동 확산 – 개요

최근 확산 중인 학습동아리 등, 국민·지역 중심의 평생학습활동을 확산·체계화
→ 창의적인 인재·경제사회 활동의 창출저변 및 창조경제 추진의 동력 확충

생활 속의 평생학습

지역 공공 프로그램 ⟷ 본격적 학습동아리

- 평생학습참여율: (2008)26.4% → (2012) 36.5%
- 최근 4년간 동아리 및 참여자 수 55% 증가*

인적•사회적자본제고

- 기업 활동
- 사회 봉사활동
- 심화 교육

학습형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원동력

[국정과제72]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실현 촉진

*2013.7월 현재 약 2,200개, 36만명 참여 (공식증빙 가능한 전국 35개 평생학습도시 등록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학습형 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등 평생학습활동과 연계된 일자리 (지역문화해설사, 방과후학교교사, 시민강사 등)

학습동아리는 정규 평생교육을 보완하는 새로운 학습모형으로서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나
아직 안정적 발전기반 취약 → 계속 지역주민이 주도하되 인프라에 대한 정부 후원/지원 강화 필요

- 대중 강좌형 공공프로그램 보완 => 개인의 다양한 학습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
- 그러나 공공시설, 전문인력 등 평생학습 전반에 걸친 인프라 부족이 발전의 걸림돌
  - 예) 농어촌 지역의 약 80%가 평생교육시설 부재 (농림부 '12). 지역평생교육기관 (약 2,900개) 중 32%가 평생교육사 미배치

| 25

정책방향과 과제 – 종합적 인적자원 정책 차원

KDI

- **진로지원 및 정보서비스 강화**
  - ➢ 노동시장 인력수급 현황, 전공별 취업실태 및 성과 등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진단도구 제공 => 기업, 교육기관, 교육수요자 모두의 합리적 판단과 대응
    * 취업눈높이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진로 DB 구축 및 확산 시스템 개발 등

- **단기적 산업수요 충족이 아닌 중장기 경제구조고도화 관점에서 종합적 접근**
  - ➢ 학력과잉 해소,'눈높이' 조정보다는 경제전체 숙련수요의 고급화, 다양화에 초점
  - ➢ 산업, 노동 관련 다른 제도·정책과의 보완성 관점에서의 문제 접근
    * 산업 차원의 숙련수요 제고정책,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노동시장 정책, 산업구조 및 숙련형성 시스템과 조응하는 복지시스템 구축, 노사관계 관행 개선 등을 함께 고려

- **정부-교육기관/수요자-산업계간의 적절한 투자재원 분담체제 정립**
  - ➢ 산업계 '응능-응익부담'과 고용창출 효과 등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공공투자의 원칙 정립 (일부 대기업에 대한 간접보조의 위험성: 엄격한 실증연구 필요)

현 단계에서의 새로운 개혁 역량 확충

KDI

■ **유아-초중등-대학- 평생교육을 아우르며, 재정투자와 제도개혁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개혁의 청사진'필요**

-교육부문의 팽창 · 세분화 ⇒ 이해관계(자)의 복잡 · 다단화 (조직화) ⇒ 변화를 둘러싼 사회성원간의 갈등 확대/심화, 개혁실행력 저하(개혁의 교착, 정치주기화)
* 교육-비교육 부문간 갈등 못지 않게, 교육내 교육단계별 부문간 갈등도 본격화

▪ **개혁의 과학화(탈정치화)를 위한 '지식기반', 실행역량 확충**

- 당위적인 정책방향 및 과제 설정(what to do, where to go)을 넘어, 개혁의 결과/성과(평균과 분포), 장애요인과 그 극복방법까지를 감안한 '실행전략'필요

* 실행역량의 제약 문제는 '대학, 유아교육·보육, 평생학습 부문의 재정투자 확대, 그리고 고교다양화,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대학구조선진화(국립대 통폐합 ·법인화,사립대 구조조정) 등의 제도개혁 과제 모두에 공통적으로 작용

- 이를 위해 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지식기반 대폭 강화 => 필요한 개혁이 합리적 갈등조정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주기를 넘어 중장기간에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통상적인 '정치적 장애요인'의 상당 부분은 '개혁지식'의 결여에 기인

* 임의적(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 실험/변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

청년고용, 대학, 우리나라의 미래전망? 개인적 소견

KDI

독특한 인적자원의 구성
- 21세기 글로벌 선도형
수평적 네트워킹 사회의 구현 가능성 -

- 우리는 다수 사회 구성원의 학습능력이 높고 균질적이어서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및 유기적인 사회연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음. 진정한 참여-성찰적(deliberative) 민주주의,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그만큼 큼.
- 그러나 **학습능력과 참여 동기**가 높은 만큼,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이해 조정 기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적인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위험성도 큼.

•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우천식 외, 2007)) KDI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의 정 토 론 회

주제발표 2

노동이주의 현황과 과제

이 규 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이주의 현황과 과제

2017. 10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Ⅰ 노동이주 수요와 공급

Ⅱ 노동이주 추이와 특징

Ⅲ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

Ⅳ 정책과제

Ⅰ. 노동이주(이민)의 수요와 공급

노동이주의 개념

-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주
  * 이주근로자, 외국인력 : 취업목적과 관계없이 경제활동에 종사

노동이민의 유형 : 계약형태구분

- 영구이주 근로자 : 정주
- 일시적 이주근로자 : 계약이주근로자, 일시적 프로젝트 이주근로자
- 기타 : Mode4(자연인 주재) :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독립전문가(IP)

3

Ⅱ. 노동이주의 추이와 특징

노동이주의 흐름 : 세계적 경향

(1970년대 이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대규모 자본을 통한 투자집중과 생산의 확대로 인해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

- 1973년 석유위기 이전까지 **제조업, 농업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에서 **초청노동자(단기순환)의 유입**이 확대

(1970-1980년대)

❍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업 분야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수요구조의 변화, 서비스 부문의 확장** 등으로 **기존의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이 변화**

- 저숙련 인력의 대량유입은 금지되었으나 **기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및 가족초청**이 이루어져 **이민사회를 형성**

(1990년대)

❍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 저숙련 직종의 해외이전의 한계,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의 인력부족 심화 등에 따라 이주 규모는 다시 급격히 증가**

- 많은 국가에서 **고숙련 근로자**에 대해 **입국 시 특혜**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 반면,
- **저숙련 이주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부정하면서도 **제한적인 단기이주및 계절적 이주** 또는 서류미비 이주자를 활용하여 수요를 충당

4

Ⅱ. 노동이주의 추이와 특징

노동이주의 흐름 : 세계적 경향

❍ **20**13년 기준으로 21개 OECD 국가의 총 인구 약 7억 5천만 명 중 **해외출생 이민자는 11.7%**로 약 8천 8백만 명임

- 해외출생 이민자의 규모로 보면 **미국이 약 4천 1백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가 **독일 1천만 명** 순임(OEC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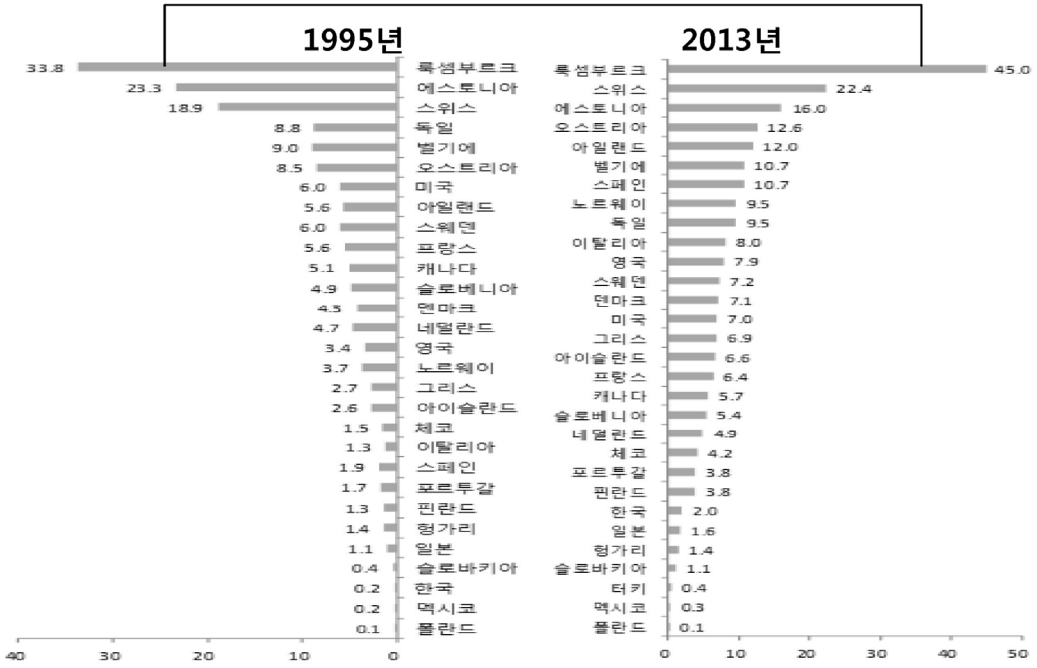
-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국가**의 경우 이민자의 **40～50%가 고용을 목적**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인 반면,

- 서유럽국가의 경우 **고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은 10～14%**에 불과하고, **가족이민이 50～70%**를 차지

- `50～`70년대 **한시적 활용 목적**으로 **저숙련 이주근로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였던 서유럽국가들은 한시적 **이주근로자들이 장기체류 또는 정주**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가족재결합, 가족형성(본국출신 배우자를 맞이함)으로 인한 **가족이민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노동이민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이규용 외, 2014).

Ⅱ. 노동이주의 추이와 특징

OECD 국가의 외국인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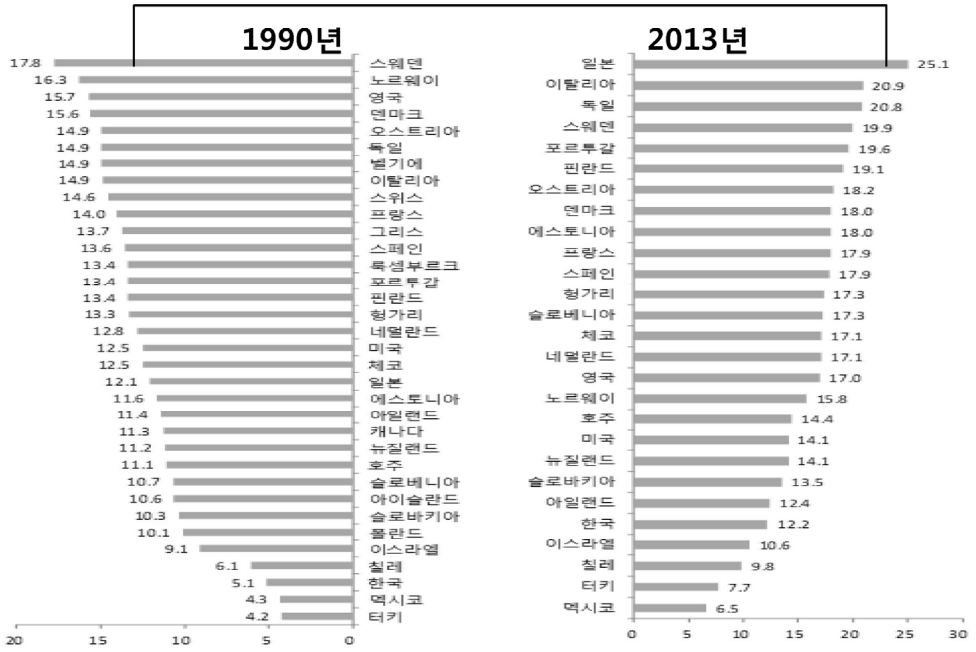


이규용 외(2015)

Ⅱ. 노동이주의 추이와 특징

OECD 국가의 고령화지수

❍ **이민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고령화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이규용 외(2015)

Ⅱ. 노동이주의 추이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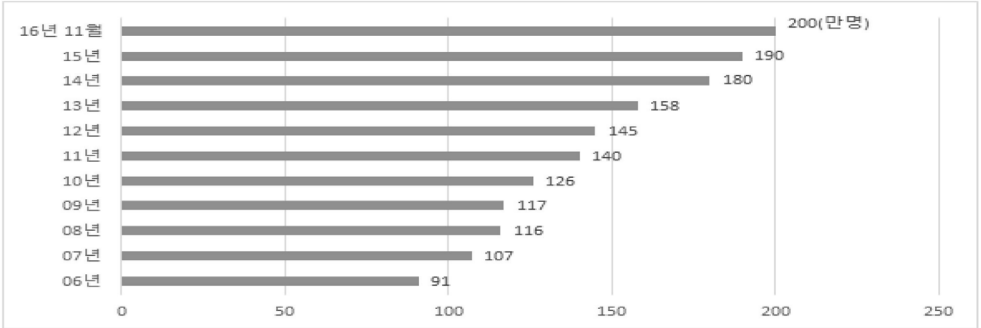
체류 외국인 추이와 특징

□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

❍ 국내 체류 외국인은 '16년 11월말현재 200만 명 수준이며 등록외국인은 이 중 58.6%인 1,169천명

<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 >

(단위 : 만명)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월보」

Ⅱ. 노동이주의 활용추이와 특징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 비취업비자 외국인 취업자의 지속적 증가

< 연도별 외국인 취업자 추이 >

(단위 : 천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전문취업(E-9)	238	(21.4)	226	(20.1)	247	(19.7)	264	(19.3)	261	(18.4)
방문취업(H-2)	241	(25.8)	186	(20.8)	216	(20.8)	234	(21.0)	221	(18.9)
전문인력(E-1~E-7)	47	(4.3)	48	(4.3)	47	(3.8)	47	(3.4)	46	(3.2)
유학생(D-2, D-4-1)	13	(7.5)	11	(7.3)	8	(6.4)	10	(6.4)	13	(7.1)
재외동포(F-4)	**99**	**(14.4)**	**124**	**(18.1)**	**148**	**(20.6)**	**180**	**(21.9)**	**199**	**(23.6)**
영주자(F-5)	47	(6.6)	58	(7.8)	72	(8.1)	83	(8.2)	88	(8.4)
결혼이민자(F-2-1, F-6)	60	(11.6)	581	(11.5)	61	(10.3)	61	(9.1)	62	(8.7)
기타	45	(8.6)	50	(10.1)	58	(10.2)	60	(10.7)	72	(11.6)
합계	791	(100)	760	(100)	852	(100)	938	(100)	962	(100)

9

Ⅱ. 노동이주의 활용추이와 특징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비중이 높음

<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 2015년 >

(단위 : 명, %)

	관리자, 전문가 등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합계
비전문취업	0.0	0.1	0.0	4.5	**65.0**	**30.4**	263,767
방문취업	1.0	0.3	10.2	0.4	**43.0**	**45.1**	234,190
전문인력	73.4	0.7	18.5	0.0	3.8	3.6	46,636
유학생	18.8	22.1	48.4	0.0	1.3	9.4	10,110
재외동포	14.4	8.1	18.6	1.3	**26.3**	**31.3**	179,754
영주자	16.4	5.5	20.8	1.2	**30.6**	**25.4**	82,923
결혼이민자	15.1	1.8	20.4	3.9	**26.4**	**32.3**	60,585
기타	27.0	11.8	9.3	8.9	**22.0**	**21.1**	59,829
전체	11.0	3.3	11.3	2.5	40.1	31.8	937,795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10

Ⅱ. 노동이주의 활용추이와 특징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 **비취업비자 외국인의 임금수준은 비전문인력과 유사**

< 외국인취업자의 비자유형별 임금 분포 : 2015년 >

(단위 : %)

	2015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체
전체	4.9	53.1	34.3	7.8	100.0
비전문취업	0.3	54.9	43.2	1.6	100.0
방문취업	3.2	60.9	33.5	2.4	100.0
전문인력	2.4	26.3	45.1	26.2	100.0
유학생	76.7	22.5	0.8	0.0	100.0
재외동포	4.6	52.6	31.1	11.7	100.0
영주자	6.0	51.7	36.9	5.5	100.0
결혼이민자	17.3	57.0	13.7	12.0	100.0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11

Ⅱ. 노동이주의 활용추이와 특징

시사점

❍ 취업비자 이외 자격의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력 정책의 영역을 **취업비자 자격 이외에 전체 이민자의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이민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주형 이민자** (F-4, F-5 등)**도 유사**한 특성을 보임

❍ 이는 ①단순노무직종, 저숙련 위주의 **한국 이민자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한편으로는 ②이민자의 유입정책이 정주형으로 나아갈 경우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12

Ⅲ. 노동이주와 노동시장영향

이민의 경제적 영향 : 이론적 논의

□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영향 : 노동시장, 공공재정(조세 vs 공공지출)**

❍ **이주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

- 다양한 이해관계 : 사업주, 내국인 근로자(임금과 고용), 소비자

❍ **불법체류 이민의 경제적 영향**

- 더 낮은 임금과 장시간근로에 따른 생산효과(낮은 의중임금) vs 중장기적으로

내국인근로자 및 합법외국인력의 구축효과

- 소득세 부담 회피 가능성
- 단속 및 추방에 따른 통제비용 증가

❍ **실증분석의 함의와 한계**

13

Ⅲ. 노동이주와 노동시장영향

이민의 경제적 영향 : 이론적 논의

□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

❍ **노동이주와 송금**

❍ 두뇌유출과 두뇌획득

□ **이민과 국제협력 필요성**

□ **이민의 경제적 영향 분석 목적**

❍ 이민의 다차원적 영향

❍ 누가 이익을 보는가? 경제전체적으로 편익인가? 중장기적인 효과는?

❍ 이민에 따른 손실(비용)부담자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 이민확대 주장의 논거의 한계 : 경제적 편익만 강조

14

Ⅲ. 노동이주와 노동시장영향

실증분석 :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효과

- 분석자료 : EPS와 고용보험 DB 연계

☐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 전체 기간 대상 분석

- 내국인 전체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성별) 외국인력의 유입은 남성 근로자 고용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성 근로자의 고용은 축소**
  * 전년 동월 내국인 근로자수 대비 외국인 고용이 1%p 증가하면 **여성 고용은 0.15%p 감소**

❍ 업종별 분석

- **제조업**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보완성**이 존재(2012년 이후는 유의하지 않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대체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향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화

☐ **사업장 단위의 분석결과**

❍ 대체적으로 **제조업과 농림업에서는 양(+)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15

Ⅲ. 노동이주와 노동시장영향

실증분석 2. 비전문외국인력 유입과 내국인 입이직률

☐ **분석자료 및 모형**

❍ (분석자료) **고용허가제 원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패널자료
- 200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외국인력 활용사업장을 추출하여 고용보험 DB와 연결

❍ **외국인력 활용사업장과 유사한 비활용사업장을 매칭**하여 비교분석 (PSM)

☐ **분석결과**

❍ **외국인력 활용기업**이 비활용기업에 비해 **입이직률이 높게** 나타나 **고용변동이 더 심하며** 이에 따라 활용기업의 **장기근속자 비중이 더 적음**

16

Ⅲ. 노동이주와 노동시장영향

실증분석 3. 외국인력 유입과 기업의 생성 및 소멸

□ 분석자료 및 모형

❍ (분석자료) **고용허가제 원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패널자료
- 2009년 패널과 2009년 패널로 구축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4년 동안 사업을 지속한 사업장들로 이들 패널의 t+1기 및 t+2기의 생존율을 비교

❍ (분석방법) 외국인력 활용기업과 비활용기업간 사업장 유지율 비교

□ 분석결과

❍ 2005년 패널의 경우 t+1기(2009년) 생존율은 93.7%이고 t+2기(2010년) 생존율은 87.9%로 **2년 동안 12.1%가 폐업**

❍ 2009년 패널은 생존율이 더욱 낮아 **2년 후 생존율이 87.2%임**
* 2009년 패널의 생존율이 훨씬 낮은 것은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이 원인

❍ 외국인 활용여부로 구분해보면 **외국인 활용사업장이 비활용사업장에 비해 생존율이 높음**

17

Ⅲ 노동이주와 노동시장영향

시사점

❍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 부정적 영향 방지방안 마련**

-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방안
- 외국인력 활용분야 선정시 노동시장 고려 필요

❍ **외국인력 활용 불가피한 경우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공급모델 설계**

-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여성 및 고령자 고용활용도 제고**와 외국인력 활용의 **보완적 방향**으로의 외국인력 정책 운용이 필요

❍ 실효성 있는 대안과 더불어 정치적 시그널도 중요
- 국민 정서 고려
- 이민자 인권보호 및 차별해소는 법제도 뿐 만 아니라 국민 정서의 동화도 필요

18

Ⅳ. 정책쟁점 및 과제

1. 현행 이민자 유입 및 활용의 쟁점

□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영향의 다차원적 요소 고려 미흡**

- **기업 인력부족 충원의 단기 대응 중심**
- 경제적 효율성(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순편익제고),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안전과 공공질서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

□ **낮은 이민자 수용성과 이민유입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치유기반 미흡**

- 일자리 경쟁 등에 따른 내국인 불만 잠재
- 이민자 차별해소, 이민사회의 비전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 미흡
- 한국사회의 계층적 사회구조와 수평적 인식(특히 전문외국인력)의 부조화

□ **(통제되지 않는) 비전문인력 유입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심, 단순 저기능 위주의 외국인력 수급체계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의 확대기반 저해
- 경쟁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율 등 국가이미지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

19

Ⅳ. 정책쟁점 및 과제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 불법체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편익수혜자의 비용부담 장치 혹은 사회적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 미흡

□ **우수 전문인력 활용전략 미흡**

- 낮은 정착률 : 유치지원정책 중심의 한계
- 생산성향상 및 기업경쟁력 제고 연계전략 필요
- 기업내 이민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체계 미흡 : 유치정책의 최종 정착은 기업이며 따라서 기업의 이민자 활용전략개선이 전문외국인력 활용개선으로 연계

□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결정체계의 문제**

① 외국인력 **수요 결정논리의 객관성 미흡**

②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분야의 **탄력적 대응체계 미흡**

- 객관적 지표의 부재에 따른 도입허용직종 선정의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
- 인력부족의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고려가 미흡

20

Ⅳ. 정책쟁점 및 과제

□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용체계 부재

◦ 숙련수준별 다양한 외국인력 도입전략,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함
◦ 외국인력 활용과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추진이 미흡
◦ 외국인력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단기적인 현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응 부족

□ 이민자(국적 비취득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정책 미흡

◦ 이민자 유입 및 정주현상은 국가간 노동이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선별정책도 중요하지만 유입된 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 통합지원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
◦ 동포, 결혼이민자, 이민자 자녀세대,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경력개발 등 이민자 특성별 노동시장 지원정책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많은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 분리, 부처중심의 접근 등
- 종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체계의 미흡

Ⅳ. 정책쟁점 및 과제

2.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정책에 대한 검토

❍ 전통적 이민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시장 여건에 기초하여 필요한 외국인력을 선발하여 공급

(유형1)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정책 채택 국가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유형2)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수요 → 정주화 → 가족이민 확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선발 이민국가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후발 이민국가
(유형3) 필요한 외국인력의 한시적 도입
. 싱가폴,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력 유입국가

❍ 이민의 역사가 짧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경제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

Ⅳ. 정책쟁점 및 과제

❍ 정주형 이민자가 증가하더라도 **이민자의 고령화 및 3D 분야기피, 우수인력에 대한 수요** 등으로 **한시적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

◦ 산업구조, 소득의 향상, 고학력화 등으로 인구변동과 관계없이 비숙련분야에 대한 외국인력 수요 확대(비전문외국인력 수요)

※ 임금조정, 취업지원, 생산기지의 이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비교역재 부문이나 임금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스매치 부문에서의 외국인력 공급은 불가피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는 인구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고급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 이민자 유입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 및 중장기적 경제적 비용 부담 우려

* **내국인 유휴인력의 활용여지가 높은 상태**에서 정주형 이민자의 유입확대는 **노동시장 교란 및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저임금근로자 문제

* 저출산문제를 야기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 --- 이민자의 보다 높은 사회적 비용

Ⅳ. 정책쟁점 및 과제

❍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입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정주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우리나라에 유입된 정주형 이민자 특성을 보면 주로 동포 중심의 정착이 많으며, 국내로 유입된 인력의 다수가 자국 및 타국으로 이동 (전통적 이민국가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한 정주여건으로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
- 인구정책으로서 거론되는 전문인력 직종(가령 E-7비자 직종)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형 또는 특정부문의 숙련수요에 의해 유입된 인력이지만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내국인들보다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민자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출산율 제고나 지속적으로 이민자가 유입이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를 야기하는 경제사회구조적 문제가 이민자에게도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

□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정책 논의는 시기상조**

Ⅳ. 정책쟁점 및 과제

3. 중장기(현 단계) 정책 방향

가. 정책기조

❍ 현 단계에서 외국인력 정책 논의는 ①**노동시장 구조개선**, ②**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 ③ 필요한 분야의 **적정한 외국인력 공급** 등의 정책의 기조가 우선될 필요

❍ 이민정책은 특정 계층의 편익이 아닌 **국민경제적 입장에서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색

- **내국인 노동시장의 영향**이나 **산업구조조정, 인구변동, 기술혁신 등 중장기 관점**을 고려하여 추진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인재 유치** 등과 같은 정책은 단기적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 외국인력 및 이민정책이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의 제고** 및 이를 위한 **내국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진행**

- 이민자 유입정책의 핵심적인 외국인력 정책도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정치적 이유**

25

Ⅳ. 정책쟁점 및 과제

나.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한 외국인력 정책추진

□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국내 노동시장의 초과공급 지속 및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기반확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

- 2017년부터 정년연장이 전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은퇴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여성의 저고용률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시급
- 당분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질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고 외국인력 수요 또한 저숙련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내국인 일자리 기반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어서 외국인력 공급확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내국인 고용창출 기반 확대 및 외국인력 유입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외국인력 도입전략을 추진**

-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 제고**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스매치 직종에 대한 **보완적 외국인력 활용전략을 추진**
- 전문외국인력 또한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기초로 정책을 추진

26

Ⅳ. 정책쟁점 및 과제

다. 통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 **통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 현행 전문인력(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구분된 취업비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대상별 정책목표를 구체화

- 동일 직종에서도 경력과 숙련정도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다를 수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직종별 숙련수준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숙련수준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방식, 체류자격, 도입허용 분야 등 관리체계를 재구축하여 활용도 제고 및 편익기반 확대

*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도입허용 직종은 직능수준과 표준직업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숙련수준 평가는 **직능, 자격,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 **전문성이 높고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정책대상별 정책방향을 강화

□ **종합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분야*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권한 및 기능을 재정립 필요**

❍ 도입분야 결정 및 탄력적 운용, 고용서비스, 근로계약체결 지원, 전문성 검증, 자격 인정, 국가간 업무협약, 고용·체류관리 및 지원 등

Ⅳ. 정책쟁점 및 과제

라.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

□ **비전문외국인력 도입 결정체계 개선**

○ (정책패러다임 전환)한계기업의 유지가 아닌 성장기업의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신규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운영

- 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에 지원 우선

❍ 산업별 도입체계를 토대로 직종별 도입체계를 마련

- **직종별 도입체계를 고려**하고 **여성이나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 외국인력의 도입 및 활용에 따른 노동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이민자 유입확대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선제조치**로서의 기능

Ⅳ. 정책쟁점 및 과제

마. 외국인력 활용의 성과제고

□ 외국인력 활용의 편익기반 확대

❍ 외국인 **교육훈련 확대, 체류지원의 효율화, 귀국지원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외국인력 지원체계** 구축

□ 비전문외국인력 공급전략의 개선과 편익제고

- **(1) 인력부족 충원형 공급전략**(외국인력 활용 일몰제)
- **(2) 내국인 일자리 창출 보완형** 외국인력 공급전략
- **(3) 생산성향상 및 기업경쟁력 제고형** 외국인력 공급전략
- **(4)** 서비스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형** 외국인력 활용전략(돌봄 노동시장 등 서비스산업 분야)

□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전문인력 질 제고)

❍ 국내 유입 전문외국인력의 정착도가 낮아 이들의 **생산성 제고 및 한국사회로의 유인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강화가 필요

❍ **중소기업 취업 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 및 유학생 출신)을 대상으로 **훈련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생산성 제고 및 우수인력 국내 정주화**를 **촉진**

□ 기업내 외국인 인적자원관리 체계 강화 및 직원교육 매뉴얼 보급 확대 등

29

Ⅳ. 정책쟁점 및 과제

바. 정주형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정책 강화

□ 이민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abor Market Policy : LMP)에서의 이민자 배려 및 이민자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보다는 보편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내에 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존의 다양한 이민자 지원정책을 **보편적인 체류지원**체계로 통합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를 강화**

❍ 이민자 유형별 **경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원

□ 이민자 자녀 노동시장 정책지원

❍ 학**교생활적응이나 교육훈련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전달체계나 프로그램으로는 **노동시장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으로는 한계**

❍ 이민자 자녀들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촉진지원체계를 재구축

30

Ⅳ. 정책쟁점 및 과제

□ **동포 정책 방향 : 당위성과 현실성의 조화**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포의 경우 **방문취업, 재외동포,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이들의 정책수요도 다양

- 동포 인력 중 청년층이나 혹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포인력의 활용도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요 존재

- 국내 체류 **동포인력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들의 **귀국지원이나 정주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

- 동포 집단거주지역의 생활환경 악화 및 내국인과의 갈등 확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

❍ 국내 체류 동포의 **대상별 특징을 감안한 노동시장 정책, 고령화 대책, 동포 청년인력 활용, 동포 우수인재 유치** 및 활용전략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31

Ⅳ. 정책쟁점 및 과제

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거버넌스 체계

❍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이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현재는 주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동포, 이민자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 다양한 이민자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재구축 및 실천가능 한 지역 단위의 통합모델 개발

- 이민 정책은 특정 부처의 고유영역이라기 보다는 각 부처의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부처간 **고유기능의 조정 및 협력체계의 재구축**이 필요

- 종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부처의 고유기능의 연계성 강화

❍ 정책평가 기능 강화

· 중장기 이민정책(전략) 수립 총괄
· 이민정책 이슈별 정책평가 및 분석보고서 작성
· 이민자 유입규모,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이민자 유입·체류지원·사회통합 등 정책 종합평가

32

감사합니다
33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의 정 토 론 회

주제발표 3

충남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분석과 시사점

신 동 호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력정책은 국가단위 외국인 노동시장 관점에서 추진되며, 이로 인해 지역단위 연구 및 관련정책은 부재한 실정

○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주된 이슈 및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력 노동시장(수요와 공급)구조 측면
- 외국인력 경제적 효과 측면
- 해외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 측면
-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문제(내국인력 대체 및 불법체류 등) 측면
- 권익보호(인권 및 복지) 측면 등

▌정부주도의 외국인력정책이 지역에 투영과정에서'정책의 사각지대'발생 및 국가단위 정책이슈가 지역단위에서 보완되어야 필요성 증대

○ 기존 외국인력 정책영역은 고용허가제를 토대로 국가단위의 외국인 노동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온 탓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양상

- 실례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급은 일원화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입된 인력의 관리 역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지역단위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제한적 범위 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머무르는 수준임

○ 그러나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역노동시장의 주요 정책이슈로 점차 대두되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지역단위의 기초적인 실태규명이나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도내 외국인력의 고용실태를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1) 연구범위

(1)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도내 외국인력의 고용실태에 주안점을 두어 내용적 범위를 설정함.

-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외 외국인력에 대한 도내 사업장의 고용수요, 채용경로, 고용관리, 근로조건, 채용수준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외국인 취업특성(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임금수준, 산업·직업별 취업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아울러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마련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등을 검토하고자 함

(2) 외국인력 범위

○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E-1～E-7까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해당함

- 한편, E-9과 H-2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 취업이 가능한 취업사증으로 E-9은 15개 저개발 국가의 순수 외국인(단순노무자)에 해당하며, H-2는 중국 및 러시아 동포로 국한됨
-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 및 설문조사 등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력의 범위로 일반고용허가자와 특례고용허가자로 한정함[1)]

1) 일반고용허가자란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구직자명부 등록자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특례고용허가자란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 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함

[표 1-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종류

구 분	유 형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비취업비자이나 취업가능함

[표 1-2] 취업비자에 따른 외국인력 구분

구 분	유 형
전문인력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인력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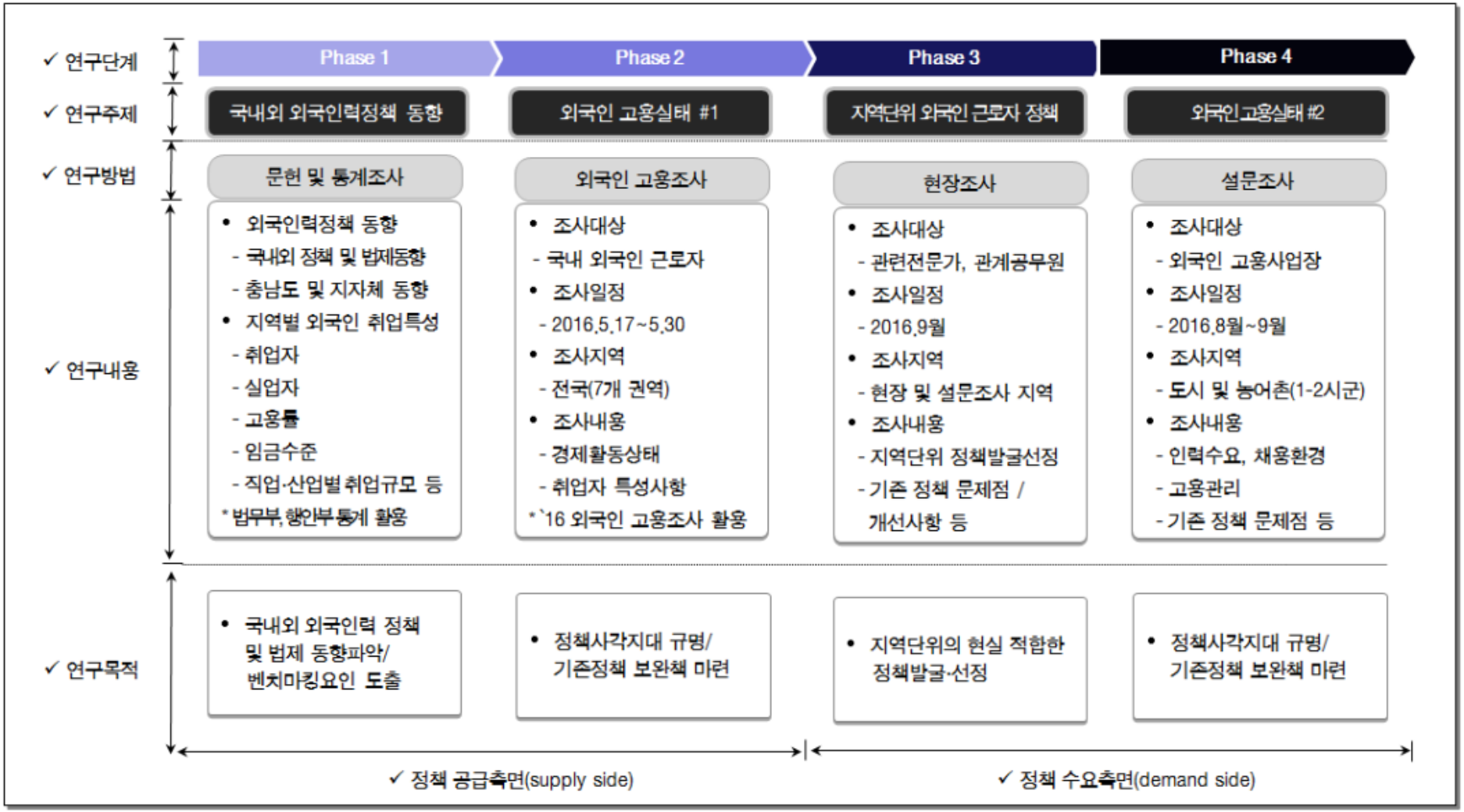
3. 연구방법 및 분석틀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수행함

[표 1-3] 연구방법 개요

구 분	조 사 개 요
실태조사	• 이용자료 - MDIS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통계청) - 2015년 지역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 - 2015년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행안부)
문헌조사	• 해외 외국인력정책 사례조사 - 공급주도적 제도(supply driven system), 수요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의 시행사례 - 대상국가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외국인 고용 사업장 • 조사일정 : 2017.8～9월 • 조사지역 : 충남도 전역(천안·아산 중심으로 표본설정) • 조사대상 : 도내 제조업체 208개소 • 조사내용 : 인력수요, 채용환경, 고용관리, 기존 정책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연구흐름 및 분석틀


✓ 연구단계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 연구주제
국내외 외국인력정책 동향
외국인 고용실태 #1
지역단위 외국인 근로자 정책
외국인고용실태 #2
✓ 연구방법
문헌 및 통계조사
외국인 고용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 연구내용
• 외국인력정책 동향
- 국내외 정책 및 법제동향
- 충남도 및 지자체 동향
• 지역별 외국인 취업특성
- 취업자
- 실업자
- 고용률
- 임금수준
- 직업·산업별 취업규모 등
*법무부, 행안부 통계 활용
• 조사대상
- 국내 외국인 근로자
• 조사일정
- 2016.5.17~5.30
• 조사지역
- 전국(7개 권역)
• 조사내용
- 경제활동상태
- 취업자 특성사항
*`16 외국인 고용조사 활용
• 조사대상
-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 조사일정
- 2016.9월
• 조사지역
- 현장 및 설문조사 지역
• 조사내용
- 지역단위 정책발굴선정
- 기존 정책 문제점 / 개선사항 등
• 조사대상
- 외국인 고용사업장
• 조사일정
- 2016.8월~9월
• 조사지역
- 도시 및 농어촌(1-2시군)
• 조사내용
- 인력수요, 채용환경
- 고용관리
- 기존 정책 문제점 등
✓ 연구목적
• 국내외 외국인력 정책 및 법제 동향파악/ 벤치마킹요인 도출
• 정책사각지대 규명/ 기존정책 보완책 마련
• 지역단위의 현실 적합한 정책발굴·선정
• 정책사각지대 규명/ 기존정책 보완책 마련
✓ 정책 공급측면(supply side)
✓ 정책 수요측면(demand side)

제2장. 국내외 외국인력 정책동향

1. 해외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2)]

1) 유학생 정책

○ 유학생정책으로 중동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 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학비, 기숙사,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과 호주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 동반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

- 또한 미국은 유학생에게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고, 호주는 유학기간 중에도 주당 20시간(방학에는 풀타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정기간의 체류를 허용하지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혜택은 부족함

○ UAE와 카타르는 GCC내 학생교류나 외국 유명대학 유치를 통해 우수 외국인재를 간접적으로 유치함

2) 우수인력정책

○ 우수인력정책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수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호주, 일본은 포인트제도를 통해 입국 시부터 우수인력을 선별하여 이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함

- 미국은 포인트제도와 유사한 다중 우선순위제도를 통해 순위에 따라 쿼터 차등적용함

- 포인트 제도는 연령, 학력, 자격증 등으로 매겨진 점수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높은 등급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음.

---

2) 해외 외국인력 정책동향은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을 발췌·인용하였음을 밝혀둠

- 개방적 이민정책을 가진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포인트 제도를 시행함(`12.5)

○ 독일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비EU국가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EU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내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제도는 EU국가간 자유로운 이동과 취업 외에 제3국(역외국) 우수인력의 EU 역내 진입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임(연봉, 경력 등 우수인력 자격요건 있음)

○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가족의 동반입국과 취업을 허용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출입국시 전용창구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3) 미숙련 인력정책

○ 미숙련인력정책으로 주요 7개국 모두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통해 미숙련 인력의 취업직종과 쿼터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부족한 노동력을 미숙련 외국인력의 단기활용을 통해 충당했던 UAE와 카타르도 최근 내국민 고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고용부담금, 독일은 고용허가수수료, 프랑스는 외국인 고용세를 징수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초과수요를 방지하고 있음

4) 사회통합사업

○ 사회통합사업으로 일본과 중동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 기본소양, 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차별금지법으로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인종,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행위로부터 외국인력을 보호하고 있음

- 일본, UAE, 카타르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외국인력에게 자국의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다문화방송을 위해 호주는 공영방송으로 정부가 다문화방송을 운영하나 다른 나라들은 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주민의 모국어로 제작되어 정보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송임

2. 정책적 시사점

○ 첫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 전문인력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

-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격, 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맞춤형 인재의 유입을 고려해야함
-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 시 서류 간소화, 별도창구 마련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국내 취업절차를 손쉽게 하는 등 가족과 동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장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학생의 절대 비중을 늘리고 졸업 후 국내 취업의 적극 지원을 고려해야 함

○ 둘째,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수의 미숙련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 마련해야함

- 산업 분야별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적정 도입규모를 도출
- 내국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 내국인 고용노력을 제도화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함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통해 내·외국인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 강화해야함

-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언어·직업 교육의 실시를 고려 해야함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력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내·외국인간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Ethnic Media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1]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비교

구분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
인력정책 전반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치와 체계적인 미숙련인력 관리(유입억제)**"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						
전문인력	유학생	-풀브라이트에서 연간 약 8천명 유치 -학위취득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신설('11년)	-Endravour Scholarship Program에서 연간 약 3천명 유치 -저렴한 의료보험, 장학금 등 제공	-아데나워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6천명 유치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입주보장	-Campus France (Agency)를 통해 연간 약 만명 유치 -생활비, 기숙사, 등록금, 비자발급 비용 지원	-JASSO(독립행정법인)에서 연간 4~6천명 유치 -장학금, 항공료, 수업비 지원	-미시간대 등 외국 유명대학 유치	-GCC 국가간 학생 교류프로그램 운영
	우수인력	-입국비자 발급시 다중 우선순위 제도 -출입국시 절차간소화, 정주와 가족취업 허용	-기술이민 등에 점수제 적용	-EU블루카드제도 도입	-EU블루카드제도 도입 -별도의 입국전용 창구를 제공하고 가족동반 허용	-입국비자 발급시 점수제 도입('12)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과 체류 허용	-개별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채용	-개별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채용
미숙련인력		-고용허가제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고용주 추천제 (고용허가제와 유사)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고용허가제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노동허가제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30개 직종은 면제)	-기능실습제도 -노동시장테스트 없음	-고용허가제, 스폰서제도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고용 의무화 추진 중	-고용허가제, 스폰서제도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고용 의무화 추진 중
사회통합	차별금지	-민권법(1964)	-인종차별법(1975)	-평등대우법(2006)	-외국인차별금지법 (2008)	-노동기준법	-연방노동법	-노동법
	정책기관	-국토안보부와 산하 7개 집행기관	-이민.시민권부 (DIC)	-연방이민난민청 (BAMP),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내무부 소속 이민청 (OFII)	-각 부처와 지자체	-내무부 이민국	-노동부
	사회통합 사업	-영어교육프로그램 (EIE) 제공 -온라인으로 미국생활 기본소양정보 제공	-"다양성 호주" 프로그램 -무료 언어훈련, 직업교육	-사회통합코스에서 독일어 교육 등 수행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프랑스 정부는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과 수용.통합 계약을 맺어 사회통합 유도	-특별한 정책 없음	-특별한 정책 없음	-특별한 정책 없음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2012.

3. 국내 외국인력 정책동향

1) 정부 정책동향

○ 외국인력은 숙련수준을 기준으로 인력대상을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함.

-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력정책 역시 저숙련 외국인력정책과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으로 크게 구분되어 추진되어 옴

○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중소제조 및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순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1991년 11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름

- 동 제도는 해외투자기업이 현지법인을 통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인력이 중견기업 이상의 해외투자기업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노정

○ 이에 정부는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름

-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외국인 연수생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제도로 활용되었으나 2007년 1월 고용허가제로 통합
- 다만, 산업연수생은 도입규모가 제한적이서 중소기업의 인력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워 2004년 4월 해당 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취업이 가능한 연수취업제를 도입함
- 한편, 동 제도의 허용업종은 중소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만 제한되어 서비스업의 경우 불법취업이 만연한 탓에 서비스 분야의 인력란에 대응하고자 2002년 12월 외국국적 동포 대상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기에 이름

○ 그러나 상기의 제도를 통한 제한적인 인력도입이 국내 인력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불법취업문제를 양산하는 등 다양한 한계점을 노정함

- 이에 정부는 2003년 8월‘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름.

[표 2-2] 국내 외국인력제도 변화

도입시기	법·제도	주요내용
1991.1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근로자 능력 향상 차원의 기술연수
1993.11	산업연수생제도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를 국내 3D업종 연수 -고용허가제로 통합(2007.1)
2000.4	연수취업제	산업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취업 가능 -연수1년 + 취업2년
2002.12	취업관리제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대상 취업활동 허용 -고용허가제에 흡수·통합(2004)
2003.8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2004.8	고용허가제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보장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 고용불가 입증할 경우 1년 이내 고용허가(최대 3년 미만으로 갱신가능)
2007.3	방문취업제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동포가 국내 연고자 없이 자유왕래하며 취업가능 -고용허가제 특례법으로 시행
2009.9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제	기존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국내취업 가능
2010.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변경 허용
2012.7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	사업주의 요청에 의거 출국 후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음
2011.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자진귀국 유도 및 영세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2017년 현재, 잠정보류)

▌고용허가제

○ 국내 생산직 인력에 대한 구인란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요구 증대됨에 따라 그간 추진되던 관련제도가 2004년 8월 현행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고용허가제는 순수외국인 대상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됨

-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015년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임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총 5개 업종임

○ 2017년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허용업종이 사실상 동일함

- 구체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허용된 업종은 중소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만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임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국적의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허용된 업종은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9개 업종), 중소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만톤 미만), 건설업임

○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도입허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비전문 취업(E-9)은 인력 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 시험합격자이며, 방문취업(H-2)은 연고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 시험, 전산추첨)가 이에 해당함

[표 2-3] 외국인력 허용업종별 기준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능)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3823)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산동물도매업(46205) -기타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46209) -가정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기타상품 전문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육상여객 운송업(492) -호텔업(55111) -여관업(55112) -일반음식점업(5611) -기타 음식점업(5619) -사업시설 및 유지관리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752) -사회복지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세탁업(96911) -개인 간병인(96993) -가구내 고용활동(97)
	-냉장냉동창고업(52102) -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4679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59201)	-좌동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좌동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014)	-좌동

자료 : https://www.eps.go.kr/

[표 2-4]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취업기간)	▸3년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공용 가능
대상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취업교육→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으로 입국→취업교육→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 변경 무제한
사업자의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고용지원센터(고용허가신청)→고용허가서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내국인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근로계약→근무시작 및 근로개시신고 *근로개시 신고 필요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설정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자료 : http://eps.hrdkorea.or.kr.

○ 한편, 전문기술 인력정책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다음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함

- 전문인력의 비자유형은 E계열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이 이에 해당함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체류자격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을 상한으로 둠

- 구체적으로 예술흥행(E-6)와 회화지도(E-2)는 각각 체류기간 상한이 6개월, 1년이며 나머지는 모두 2년임

[표 2-5] 전문기술인력의 체류자격별 취업활동 범위와 체류기간

구 분	체류자격 해당자 및 취업활동 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년
연구(E-3)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6개월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자료 : 출입국관리정책론(법무부) 및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유길상 외).

2) 충남도 정책동향

○ 충남도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주거제공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음

- 2017년 현재, 총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등 지원기관 운영이 핵심사업임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경우, 천안, 아산, 서천, 당진 4개 지역에 기 개소하였거나 개소 예정임

○ 사업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은 도비 100%사업임

- 반면,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사업은 도와 해당시군간 매칭사업임
- 운영주체 기준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은 도 주관사업이며,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사업은 해당시가 운영함

[표 2-6] 충남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 4,500천원(도비 100%)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사업내용 : 지원센터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종사자 교육을 통한 지원서비스 질적제고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사업비 : 150,000천원(도비 100%)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내용 : 사업장 폐쇄, 임금체불, 산재, 폭력 등의 인권침해 및 실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재취업 전 숙식 제공(1개월) 및 구직지원, 사회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간 : 2018년 말(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위탁선정 심사)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사업비 : 1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운영주체 : 아산시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여성근로자 -사업내용 : 주거시설 임대운영(주공 2단지 아파트 101동 402호)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지원	-사업비 : 220,000천원(도비 30%, 시군비70%) -운영주체 : 천안, 아산, 서천, 당진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비 지원(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충남도 외국인력 지원사업 :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 2017년 현재,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정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인력으로 7명, 교육운영인력 4명이 관련업무 수행중임

- 총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532,625천원 수준이며, 주요 지원사업은 상담, 교육, 문화, 특성화사업 등임

[표 2-7]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조직현황

센터명	인원		센터장	상담			교육운영		
	정원	현원		팀장	과장	상담원	팀장	과장	대리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13	12	1	1	1	6(5)	1	1	2

* 결혼이민자(F-5 3명, 귀화 2명), 현지어상담원(한국인 1명), ( )내는 현재인원
자료 :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http://www.cfwc.or.kr/).

○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담사업은 ①사업장 내 애로갈등, ②사업장 변경관련 애로, ③일상생활 고충, ④질병/부상/사망, ⑤귀국관련 고충, ⑥언어소통문제, ⑦행정신고 업무지원 등 7개 분야에서 5개국 언어로 이루어짐
- 교육사업은 ①한국어, ②정보화, ③생활법률, ④귀국의식, ⑤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이며, 이 중 귀국의식교육과 관련하여 체류 및 귀국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사업은 한국 및 외국문화 소개를 통해 한국생활 적응과 다문화적 감수성 배양을 위해 외국인 축제개최, 한국문화탐방, 힐링캠프를 운영함
- 특성화 사업은 보건위생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 각종 범죄예방,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교통안전교육, 무료진료, 음악교실,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함

[표 2-8] 외국인력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상담	•신속한 전화 상담과 전문적인 내방 상담 •농축산·어업 및 원거리 소외지역을 위한 방문상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원 교육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문화, 직장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교육 •귀국지원 통합서비스, 교육강사 교육
문화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 마련
특성화	•생활·법률 및 무료진료, 체육활동, 이미용 등

제3장. 충남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및 고용실태

1.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 국내 외국인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2012년 1,114천명에서 2016년 1,425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3%씩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5%, 대전·충남·충북 7.2%, 부산·울산·경남 6.4%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만 15세 이상 외국인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539천명으로 전국대비 37.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385천명(27.0%), 부산·울산·경남 164천명(11.5%)임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15세 이상 외국인의 64.9%인 925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1%인 500천명 수준임

○ 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2016년 현재, 만 15세 이상 외국인은 총 132천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인 비중추이를 보면 2012년 9.0%에서 2016년 9.3%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

- 또한 15세 이상 외국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00천명에서 2016년 132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7.2%씩 증가하는 추세임

[표 3-1] 지역별 생산가능인구(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
	15세 이상	비중	15세 이상	비중	
전국	1,114	100.0	1,425	100.0	6.3
수도권	731	65.6	925	64.9	6.1
서울	327	29.4	385	27.0	4.2
경기·인천	404	36.3	539	37.8	7.5
비수도권	383	34.4	500	35.1	6.9
부산·울산·경남	128	11.5	164	11.5	6.4
대전·충남·충북	100	9.0	132	9.3	7.2
대구·경북	66	5.9	84	5.9	6.2
광주·전남·전북	66	5.9	83	5.8	5.9
강원·제주	23	2.1	36	2.5	11.9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 국내 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824천명에서 2016년 1,005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전·충남·충북 6.6%, 경기·인천 6.2%, 광주·전남·전북 5.7%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총 1,005천명으로 이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409천명으로 전국대비 40.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240천명(23.9%), 부산·울산·경남 125천명(12.4%)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경제활동인구의 64.6%인 649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4%인 356천명 수준임

○ 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72천명에서 2016년 93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6%씩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총 93천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

- 또한 동 기간 중 전국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2년 8.7%에서 2016년 9.3%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
	경제활동인구*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국	824	100.0	1,005	100.0	5.1
수도권	543	65.9	649	64.6	4.6
서울	222	26.9	240	23.9	2.0
경기·인천	321	39.0	409	40.7	6.2
비수도권	282	34.2	356	35.4	6.0
부산·울산·경남	101	12.3	125	12.4	5.5
대전·충남·충북	72	8.7	93	9.3	6.6
대구·경북	49	5.9	57	5.7	3.9
광주·전남·전북	44	5.3	55	5.5	5.7
강원·제주	15	1.8	26	2.6	14.7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12년 791천명에서 2016년 962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5.0%씩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전·충남·충북 6.8%, 경기·인천 6.0%, 부산·울산·경남 5.1%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총 962천명으로 이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392천명으로 전국대비 40.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226천명(23.5%), 부산·울산·경남 122천명(12.7%)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외국인 취업자의 64.2%인 618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9%인 345천명 수준임

○ 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외국인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70천명에서 2016년 91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8%씩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총 91천명으로 전국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동 기간 중 전국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2012년 8.8%에서 2016년 9.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 지역별 취업자(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국	791	100.0	962	100.0	5.0
수도권	514	65.0	618	64.2	4.7
서울	204	25.8	226	23.5	2.6
경기・인천	311	39.3	392	40.7	6.0
비수도권	277	35.0	345	35.9	5.6
부산・울산・경남	100	12.6	122	12.7	5.1
대전・충남・충북	70	8.8	91	9.5	6.8
대구・경북	49	6.2	55	5.7	2.9
광주・전남・전북	43	5.4	52	5.4	4.9
강원・제주	15	1.9	25	2.6	13.6

*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 경제활동참가율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76.4%이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5.8%, 강원·제주 70.2%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 3.5p%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대비 소폭 하락함

- 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수도권보다 낮은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2.2%p 하락한 것에 비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 큰 4.1%p 하락함

-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72.0%에서 2016년 70.6%로 1.4p%하락함

○ 다음으로 고용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현재,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74.1%이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2.7%, 강원·제주 68.8%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의 고용률은 전국평균 3.4p%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대비 소폭 하락함

- 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고용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은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3.4%p 하락한 것에 비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 큰 3.6%p 하락함

-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72.0%에서 2016년 70.6%로 1.2p%하락함

○ 끝으로 실업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현재,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8%이며, 다음으로 광주·전남·전북 5.5%, 경기·인천 4.2%, 강원·제주 3.8%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2~2016년 기간 중 서울,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은 실업률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시 말해, 동 기간 중 서울,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의 실업률은 전국 대비 개선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실업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1.3%p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6p%p 하락함

-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2.8%에서 2016년 2.2%로 0.6p% 하락함

[표 3-4]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외국인) 현황

(단위: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량(`12~`16)	고용률**		증감량(`12~`16)	실업률***		증감량(`12~`16)
	2012	2016		2012	2016		2012	2016	
전국	74.0	70.5	3.5	71.0	67.6	-3.4	4.0	4.3	0.3
수도권	74.3	70.2	-4.1	70.4	66.8	-3.6	5.3	4.8	-0.6
서울	67.9	62.3	-5.6	62.3	58.6	-3.7	8.1	5.8	-2.3
경기·인천	79.4	75.8	-3.6	77.0	72.7	-4.3	3.1	4.2	1.0
비수도권	73.5	71.3	-2.2	72.3	68.9	-3.4	1.8	3.1	1.3
부산·울산·경남	78.7	76.4	-2.3	77.8	74.1	-3.7	1.0	2.4	1.4
대전·충남·충북	72.0	70.6	-1.4	69.8	68.6	-1.2	2.8	2.2	-0.6
대구·경북	74.6	67.8	-6.8	73.8	65.1	-8.7	0.0	3.5	3.5
광주·전남·전북	67.1	66.0	-1.1	66.0	63.2	-2.8	2.3	5.5	-3.2
강원·제주	65.9	70.7	4.8	65.7	68.8	3.1	0.0	3.8	3.8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2. 외국인 고용동향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015년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608,116명으로 이 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228,836명으로 전국대비 37.6%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116,817명(19.2%), 경남 52,135명(8.6%)등의 순임

○ 국내 외국인 근로자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520,906명에서 2015년 608,11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임

-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충북 15.2%, 전남 13.6%, 울산 12.8%, 경북 12.2%, 충남 11.4%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8.0%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등 6개 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전국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 동향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연평균 증가율
	외국인근로자	비중	외국인근로자	비중	('13~'15)
합계	520,906	100.0	608,116	100.0	8.0
서울	116,113	22.3	116,817	19.2	0.3
부산	15,938	3.1	17,299	2.8	4.2
대구	10,639	2.0	12,348	2.0	7.7
인천	26,399	5.1	30,189	5.0	6.9
광주	6,345	1.2	7,538	1.2	9.0
대전	3,641	0.7	3,759	0.6	1.6
울산	10,829	2.1	13,779	2.3	12.8
세종	1,650	0.3	1,771	0.3	3.6
경기	187,392	36.0	228,836	37.6	10.5
강원	5,031	1.0	5,893	1.0	8.2
충북	14,602	2.8	19,371	3.2	15.2
충남	28,510	5.5	35,351	5.8	11.4
전북	9,364	1.8	11,389	1.9	10.3
전남	12,375	2.4	15,974	2.6	13.6
경북	23,475	4.5	29,530	4.9	12.2
경남	44,142	8.5	52,135	8.6	8.7
제주	4,461	0.9	6,137	1.0	17.3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 한편, 충남의 경우 2015년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35,351명이며, 이 중 천안지역이 가장 많은 11,015명으로 충남대비 31.2%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아산 9,247명(26.2%), 당진시 3,606명(10.2%), 논산 2,127명(6.0%), 보령 1,780명(5.0%), 서산 1,564(4.4%)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산업집적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권 지역에 도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1.9%인 25,432명이 거주함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28,510명에서 2015년 35,351명으로 동 기준 중 연평균 11.4%씩 증가하는 추세임

- 시군별로는 홍성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공주 21.0%, 보령 17.3%, 부여 16.8%, 태안 14.7%, 금산 13.7%, 서천 13.1%등임

- 이들 지역은 도내 평균인 11.4%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천안,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청양은 도내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임(예산군은 도내 평균과 동일함)

[표 3-6] 충남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동향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연평균 증가율 (`13~`15)
	외국인근로자	비중	외국인근로자	비중	
합계	28,510	100.0	35,351	100.0	11.4
천안시	9,024	31.7	11,015	31.2	10.5
공주시	447	1.6	654	1.9	21.0
보령시	1,293	4.5	1,780	5.0	17.3
아산시	7,461	26.2	9,247	26.2	11.3
서산시	1,411	4.9	1,564	4.4	5.3
논산시	2,036	7.1	2,127	6.0	2.2
계룡시	56	0.2	66	0.2	8.6
당진시	2,773	9.7	3,606	10.2	14.0
금산군	494	1.7	639	1.8	13.7
부여군	398	1.4	543	1.5	16.8
서천군	643	2.3	822	2.3	13.1
청양군	229	0.8	259	0.7	6.3
홍성군	756	2.7	1,137	3.2	22.6
예산군	910	3.2	1,130	3.2	11.4
태안군	579	2.0	762	2.2	14.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44.2%인 268,55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55,092명(9.1%), 인도네시아 36,249명(6.0%), 캄보디아 30,680명(5.0%), 필리핀 27,627명(4.5%), 태국 23,158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4.7%인 12,25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3,738명(10.6%), 캄보디아 3,279명(9.3%), 인도네시아 2,638명(7.5%), 태국 1,821명(5.2%)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전체 중국(한국계)근로자의 88.4%인 10,828명이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 거주함

[표 3-7] 국내 시도·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5)

[단위 : 명]

구분	합계	동북아North-eastAsia						동남아시아South-eastAsia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한국계)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기타					
합계	608,116	300,088	21,649	268,558	243	1,594	8,044	188,367	55,092	27,627	23,158	36,249	30,680	13,855	221	1,485	63,148	31,934	12,083	818	11,678
비중	100.0	49.3	3.6	44.2	0.0	0.3	1.3	31.0	9.1	4.5	3.8	6.0	5.0	2.3	0.0	0.2	10.4	5.3	2.0	0.1	1.9
서울	116,817	103,300	4,195	97,947	151	532	475	3,772	1,109	1,258	486	252	253	133	141	140	1,414	831	3,606	151	3,743
부산	17,299	3,861	1,305	2,305	7	96	148	8,869	3,472	1,288	451	2,045	723	839	6	45	1,818	1,277	728	72	674
대구	12,348	2,322	500	1,698	2	30	92	5,922	1,886	1,251	238	1,802	462	278	2	3	2,070	821	649	18	546
인천	30,189	12,523	1,214	10,691	10	31	577	11,761	3,559	1,986	1,749	2,218	943	1,252	8	46	3,287	1,560	562	27	469
광주	7,538	1,813	335	1,404	1	13	60	3,338	796	569	288	673	701	263	3	45	928	852	343	8	256
대전	3,759	1,758	480	1,164	3	62	49	591	160	138	61	136	69	16	3	8	304	122	512	21	451
울산	13,779	6,722	346	6,107	0	15	254	3,934	1,230	861	217	792	558	266	3	7	1,857	734	229	6	297
세종	1,771	492	56	415	1	4	16	856	273	62	124	169	163	65	0	0	196	153	44	3	27
경기	228,836	120,284	4,910	110,845	44	550	3,935	68,433	15,671	12,097	12,715	8,610	12,991	6,031	26	292	24,599	10,535	2,491	366	2,128
강원	5,893	1,473	416	986	0	12	59	2,850	797	235	199	592	742	276	0	9	728	240	301	11	290
충북	19,371	7,007	375	6,112	0	19	501	6,715	2,042	1,024	1,080	1,067	1,105	391	1	5	3,152	1,851	300	18	328
충남	35,351	13,870	1,115	12,252	0	92	411	13,560	3,738	1,104	1,821	2,638	3,279	839	2	139	4,275	2,752	480	55	359
전북	11,389	2,925	549	2,103	1	16	256	5,008	1,328	592	408	944	1,209	435	0	92	1,943	922	255	3	333
전남	15,974	4,180	1,389	2,455	10	25	301	7,675	2,662	581	448	1,614	1,778	328	1	263	2,384	1,138	278	5	314
경북	29,530	6,060	1,281	4,433	0	50	296	15,479	5,064	1,711	916	4,558	2,211	941	9	69	5,103	1,841	557	19	471
경남	52,135	9,590	2,050	6,993	2	43	502	26,602	10,407	2,764	1,726	6,821	3,204	1,416	16	248	8,535	6,274	467	32	635
제주	6,137	1,908	1,133	648	11	4	112	3,002	898	106	231	1,318	289	86	0	74	555	31	281	3	35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표 3-8] 충남 시군·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동북아North-eastAsia					동남아시아South-eastAsia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기타					
합계	**35,351**	**13,870**	**1,115**	**12,252**	**92**	**411**	**13,560**	**3,738**	**1,104**	**1,821**	**2,638**	**3,279**	**839**	**2**	**139**	**4,275**	**2,752**	**480**	**55**	**359**
	100.0	39.2	3.2	34.7	0.3	1.2	38.4	10.6	3.1	5.2	7.5	9.3	2.4	0.0	0.4	12.1	7.8	1.4	0.2	1.0
천안	11,015	5,348	155	4,997	49	147	3,424	760	342	589	684	770	252	1	26	1,139	781	205	29	89
	31.2	15.1	0.4	14.1	0.1	0.4	9.7	2.1	1.0	1.7	1.9	2.2	0.7	0.0	0.1	3.2	2.2	0.6	0.1	0.3
공주	654	192	19	161	1	11	278	60	11	34	85	76	12	0	0	111	12	35	2	24
	1.9	0.5	0.1	0.5	0.0	0.0	0.8	0.2	0.0	0.1	0.2	0.2	0.0	0.0	0.0	0.3	0.0	0.1	0.0	0.1
보령	1,780	421	255	146	0	20	1,130	567	18	80	295	134	20	0	16	172	29	18	0	10
	5.0	1.2	0.7	0.4	0.0	0.1	3.2	1.6	0.1	0.2	0.8	0.4	0.1	0.0	0.0	0.5	0.1	0.1	0.0	0.0
아산	9,247	3,942	141	3,686	34	81	3,000	667	307	492	588	652	269	1	24	958	1,200	63	19	65
	26.2	11.2	0.4	10.4	0.1	0.2	8.5	1.9	0.9	1.4	1.7	1.8	0.8	0.0	0.1	2.7	3.4	0.2	0.1	0.2
서산	1,564	841	43	779	1	18	402	95	25	58	106	106	9	0	3	116	109	54	1	41
	4.4	2.4	0.1	2.2	0.0	0.1	1.1	0.3	0.1	0.2	0.3	0.3	0.0	0.0	0.0	0.3	0.3	0.2	0.0	0.1
논산	2,127	243	15	194	6	28	1,443	244	73	171	118	761	54	0	22	313	93	18	1	16
	6.0	0.7	0.0	0.5	0.0	0.1	4.1	0.7	0.2	0.5	0.3	2.2	0.2	0.0	0.1	0.9	0.3	0.1	0.0	0.0
계룡	66	23	13	10	0	0	15	13	0	0	0	2	0	0	0	10	0	7	0	11
	0.2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진	3,606	1,507	112	1,366	0	29	1,094	322	104	161	227	176	97	0	7	671	292	16	0	26
	10.2	4.3	0.3	3.9	0.0	0.1	3.1	0.9	0.3	0.5	0.6	0.5	0.3	0.0	0.0	1.9	0.8	0.0	0.0	0.1
금산	639	146	18	106	0	22	275	59	41	24	80	52	13	0	6	152	51	5	0	10
	1.8	0.4	0.1	0.3	0.0	0.1	0.8	0.2	0.1	0.1	0.2	0.1	0.0	0.0	0.0	0.4	0.1	0.0	0.0	0.0
부여	543	96	9	80	0	7	306	55	19	68	32	122	10	0	0	87	34	9	0	11
	1.5	0.3	0.0	0.2	0.0	0.0	0.9	0.2	0.1	0.2	0.1	0.3	0.0	0.0	0.0	0.2	0.1	0.0	0.0	0.0
서천	822	214	157	52	0	5	445	172	40	10	166	22	10	0	25	117	28	7	1	10
	2.3	0.6	0.4	0.1	0.0	0.0	1.3	0.5	0.1	0.0	0.5	0.1	0.0	0.0	0.1	0.3	0.1	0.0	0.0	0.0
청양	259	35	1	33	0	1	143	32	14	14	16	61	6	0	0	59	14	3	0	5
	0.7	0.1	0.0	0.1	0.0	0.0	0.4	0.1	0.0	0.0	0.0	0.2	0.0	0.0	0.0	0.2	0.0	0.0	0.0	0.0
홍성	1,137	286	25	250	0	11	633	237	33	54	79	196	30	0	4	141	40	17	2	18
	3.2	0.8	0.1	0.7	0.0	0.0	1.8	0.7	0.1	0.2	0.2	0.6	0.1	0.0	0.0	0.4	0.1	0.0	0.0	0.1
예산	1,130	346	30	287	0	29	522	131	66	62	72	137	51	0	3	173	66	13	0	10
	3.2	1.0	0.1	0.8	0.0	0.1	1.5	0.4	0.2	0.2	0.2	0.4	0.1	0.0	0.0	0.5	0.2	0.0	0.0	0.0
태안	762	230	122	105	1	2	450	324	11	4	90	12	6	0	3	56	3	10	0	13
	2.2	0.7	0.3	0.3	0.0	0.0	1.3	0.9	0.0	0.0	0.3	0.0	0.0	0.0	0.0	0.2	0.0	0.0	0.0	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2)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 2015년 현재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총 66,345개소로 이 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27,644개소로 전국대비 41.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남 7,153개소(10.8%), 충남 4,616개소(7.0%), 서울 4,350개소(6.6%)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53.5%인 35,515개소가 소재함

○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64,109개소에서 2016년 하반기 66,345개소로 동 기간 중 연평균 0.9%씩 증가하는 추세임

- 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세종 12.9%, 전남 11.7%, 전북 8.7%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충남, 경북, 경남지역도 (+)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서울은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연평균 12.1%씩 감소하는 지역임

○ 2016년 하반기 현재, 2012년 하반기 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주로 광역시로 나타남

- 반면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주로 광역도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임

- 한편, 광주와 경기지역은 비중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총 4,616개소로 전국대비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전국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에 6.1%에서 2013년 및 2014년 하반기 6.6%, 2015년 하반기 6.7%, 2016년 하반기 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3,914개소에서 2016년 하반기 4,616개소로 동 기간 중 연평균 4.2%씩 증가하는 추세임

[표 3-9] 전국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사업장 수)

(단위: 개소, %)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연평균 증가율 (`12~`16)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합계	64,109	100.0	61,736	100.0	67,381	100.0	68,665	100.0	66,345	100.0	0.9
서울	7,283	11.4	5,927	9.6	6,904	10.2	6,854	10.0	4,350	6.6	-12.1
부산	1,776	2.8	1,711	2.8	1,857	2.8	1,840	2.7	1,772	2.7	-0.1
대구	1,211	1.9	1,184	1.9	1,233	1.8	1,231	1.8	1,201	1.8	-0.2
인천	3,667	5.7	3,536	5.7	3,731	5.5	3,683	5.4	3,521	5.3	-1.0
광주	763	1.2	777	1.3	829	1.2	805	1.2	780	1.2	0.6
대전	258	0.4	218	0.4	227	0.3	251	0.4	226	0.3	-3.3
울산	1,266	2.0	1,217	2.0	1,296	1.9	1,323	1.9	1,179	1.8	-1.8
세종	141	0.2	178	0.3	201	0.3	227	0.3	229	0.3	12.9
경기	26,708	41.7	25,184	40.8	26,851	39.8	27,311	39.8	27,644	41.7	0.9
강원	759	1.2	796	1.3	923	1.4	963	1.4	1,018	1.5	7.6
충북	2,094	3.3	2,220	3.6	2,473	3.7	2,558	3.7	2,665	4.0	6.2
충남	3,914	6.1	4,065	6.6	4,444	6.6	4,621	6.7	4,616	7.0	4.2
전북	1,381	2.2	1,536	2.5	1,754	2.6	1,819	2.6	1,929	2.9	8.7
전남	2,088	3.3	2,248	3.6	2,685	4.0	2,990	4.4	3,252	4.9	11.7
경북	3,250	5.1	3,404	5.5	3,691	5.5	3,645	5.3	3,589	5.4	2.5
경남	6,839	10.7	6,749	10.9	7,353	10.9	7,488	10.9	7,153	10.8	1.1
제주	711	1.1	786	1.3	929	1.4	1,056	1.5	1,221	1.8	14.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2015년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은 총 221,914명으로 이 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89,085명으로 전국대비 40.1%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남 29,873명(13.5%), 충남 16,986명(7.7%), 경북 15,846명(7.1%)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46.3%인 102,730명이 고용됨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62,858명에서 2016년 하반기 221,914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임

- 시도별로는 세종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충북 13.6%, 제주 13.2%, 전남 12.6%, 강원 11.2%, 경기 9.8%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8.0%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임(전북은 전국평균과 동일)

-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역도의 증가추세가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현재, 2012년 하반기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북, 경남지역임

- 반면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임

- 한편, 대전과 전북지역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의 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전국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외국인근로자수)

(단위: 명, %)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연평균 증가율 ('12~'16)
	근로자수	비중	근로자수	비중	근로자수	비중	근로자수	비중	근로자수	비중	
합계	162,858	100.0	178,200	100.0	204,162	100.0	212,319	100.0	221,914	100.0	8.0
서울	1,572	1.0	1,390	0.8	1,630	0.8	1,576	0.7	1,777	0.8	3.1
부산	6,462	4.0	6,597	3.7	7,638	3.7	7,977	3.8	7,951	3.6	5.3
대구	4,590	2.8	5,081	2.9	5,880	2.9	5,976	2.8	5,935	2.7	6.6
인천	9,988	6.1	11,129	6.2	12,211	6.0	11,804	5.6	11,868	5.3	4.4
광주	2,858	1.8	2,991	1.7	3,389	1.7	3,460	1.6	3,517	1.6	5.3
대전	568	0.3	613	0.3	590	0.3	707	0.3	677	0.3	4.5
울산	4,135	2.5	4,320	2.4	4,936	2.4	5,051	2.4	4,526	2.0	2.3
세종	490	0.3	687	0.4	803	0.4	879	0.4	943	0.4	17.8
경기	61,233	37.6	69,445	39.0	79,196	38.8	82,235	38.7	89,085	40.1	9.8
강원	1,859	1.1	2,091	1.2	2,347	1.1	2,664	1.3	2,846	1.3	11.2
충북	6,901	4.2	8,106	4.5	9,457	4.6	10,061	4.7	11,476	5.2	13.6
충남	12,941	7.9	13,531	7.6	14,899	7.3	15,563	7.3	16,986	7.7	7.0
전북	4,925	3.0	5,443	3.1	6,127	3.0	6,482	3.1	6,693	3.0	8.0
전남	5,814	3.6	6,182	3.5	7,881	3.9	8,930	4.2	9,360	4.2	12.6
경북	12,135	7.5	13,338	7.5	15,688	7.7	15,725	7.4	15,846	7.1	6.9
경남	24,832	15.2	25,553	14.3	29,671	14.5	31,065	14.6	29,873	13.5	4.7
제주	1,555	1.0	1,703	1.0	1,819	0.9	2,164	1.0	2,555	1.2	13.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12,941명으로 전국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인 비중추이를 보면 2012년 하반기에 7.9%에서 2013년 하반기 7.6%,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 7.3%로 지속 감소하다 2016년 하반기에는 7.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도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2,941명에서 2016년 하반기 16,98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7.7%씩 증가함

[표 3-11]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외국인 평균고용 규모 (단위: 명)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전국	2.5	2.9	3.0	3.1	3.3
서울	0.2	0.2	0.2	0.2	0.4
부산	3.6	3.9	4.1	4.3	4.5
대구	3.8	4.3	4.8	4.9	4.9
인천	2.7	3.1	3.3	3.2	3.4
광주	3.7	3.8	4.1	4.3	4.5
대전	2.2	2.8	2.6	2.8	3.0
울산	3.3	3.5	3.8	3.8	3.8
세종	3.5	3.9	4.0	3.9	4.1
경기	2.3	2.8	2.9	3.0	3.2
강원	2.4	2.6	2.5	2.8	2.8
충북	3.3	3.7	3.8	3.9	4.3
충남	3.3	3.3	3.4	3.4	3.7
전북	3.6	3.5	3.5	3.6	3.5
전남	2.8	2.8	2.9	3.0	2.9
경북	3.7	3.9	4.3	4.3	4.4
경남	3.6	3.8	4.0	4.1	4.2
제주	2.2	2.2	2.0	2.0	2.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국내 전체사업장의 평균고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하반기 2.5명에서 2016년 하반기 3.3명으로 약 0.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하반기 대비 2016년 하반기의 평균고용규모가 감소한 지역은 전북과 제주지역이며, 나머지 모든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하반기 현재, 평균고용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9명이며 다음으로 부산과 광주 각각 4.5명, 경북 4.4명, 충북 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상기지역 외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남지역은 전국평균 3.3명을 상회하는 반면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는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임

○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고용허가제 사업장 외국인의 평균고용 규모는 3.7명 수준으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평균고용 규모추이를 보면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에 3.3%에서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 3.4%, 2016년 하반기에는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공급측면[3)]

1) 외국인 고용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동 조사의 총 37개 조사항목 중 18개 항목을 추출하여 공급측면에서 외국인 고용실태를 파악함

○ 조사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여부, 취업분야 등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분석의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75호)

○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16. 5. 15.
- 조사대상기간 : 2016. 5. 8.(일) ~ 5. 14.(토)
- 조사실시기간 : 2016. 5. 17.(화) ~ 5. 30.(월)(14일간)

○ 조사·작성주기

- 연간(1년 주기)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법무부「등록외국인 명부」와「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15세 이상 외국인 11,564명(충청권 1400명)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항목

- 기본사항(학력, 혼인상태, 거처종류 등), 성별·국적별·체류자격별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특성사항(종사상지위, 산업·직업, 취업시간, 근속기간 등) 등 37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응답자 기입방식 조사도 일부 허용
- 언어 소통 곤란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콜센터 활용

○ 조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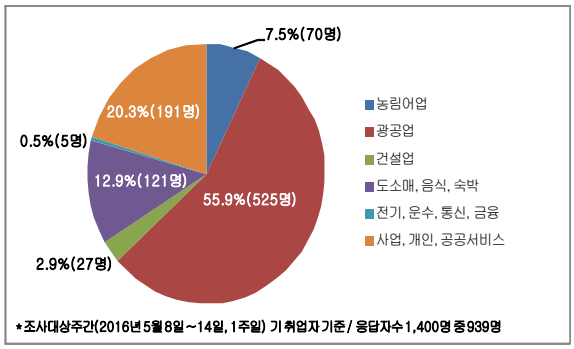
-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고용한 임시조사원이 조사대상 외국인을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식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2016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외국인 고용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됨. 유의할 점은 동 조사의 결과를 광역시도 단위가 아닌 7개 권역단위로 발표함에 따라 충남은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 포함된 바, 충남지역만의 외국인 고용실태로 보기에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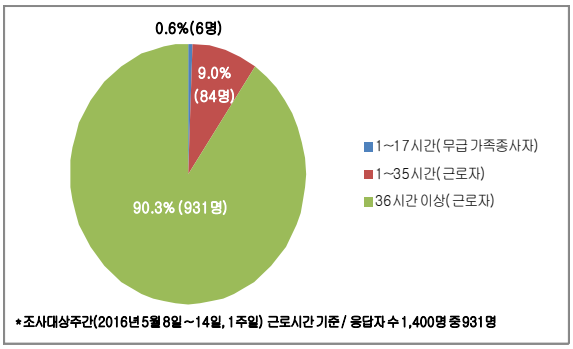
2) 조사결과

○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으로는 광공업이 5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0.3%),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12.9%), 농림어업(7.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시간으로 구분하면 36시간 이상(근로자)이 9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음으로 1~35시간(근로자)(9.0%), 1~17시간(무급 가족종사자)(0.6%)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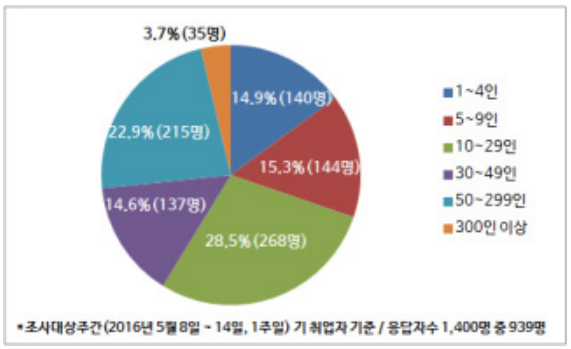
[그림 4-1]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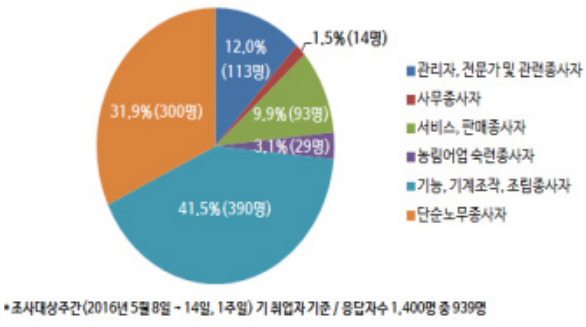
[그림 4-2] 취업시간 구분

○ 고용사업장의 종사자수 규모는 10~29인 업체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50~299인(22.9%), 5~9인(15.3%), 1~4인(14.9%), 30~49인(14.6%)등임

○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으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가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단순 노무종사자(31.9%),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2.0%), 서비스, 판매종사자(9.9%)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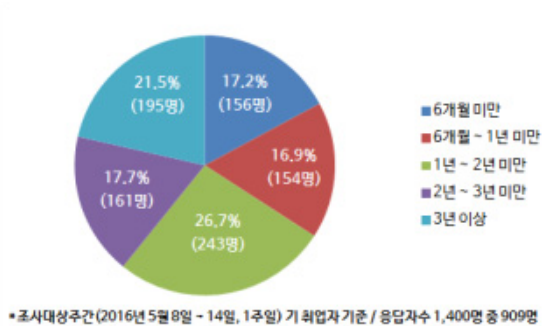
[그림 4-3] 사업장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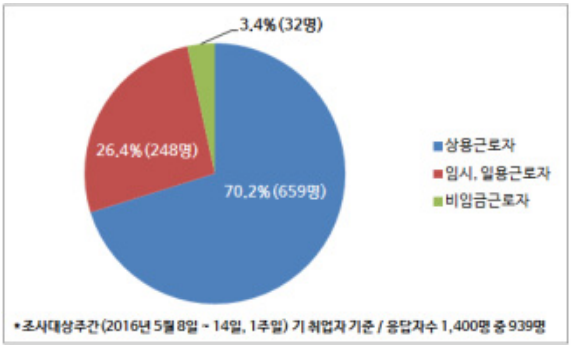
[그림 4-4] 직업분류

○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는 1년~2년 미만이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3년 이상(21.5%), 2년~3년 미만(17.7%), 6개월 미만(17.2%), 6개월~1년 미만(16.9%)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근로자가 7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임시, 일용근로자(26.4%), 비임금 근로자(3.4%)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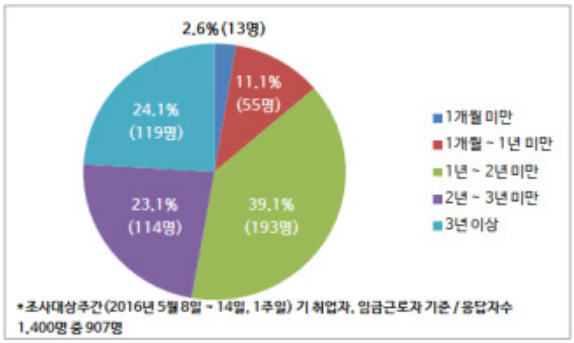
[그림 4-5] 근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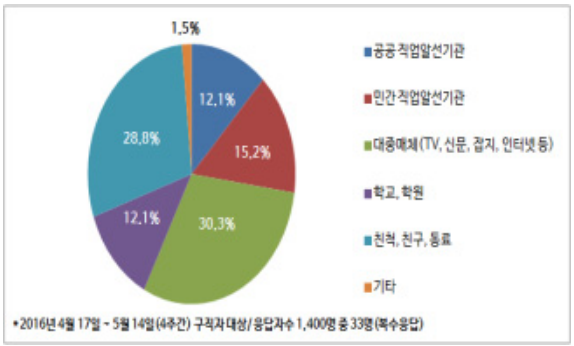
[그림 4-6] 종사상 지위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2년 미만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3년 이상(24.1%), 2년~3년 미만(23.1%), 1개월~1년 미만(11.1%)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경로는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가 전체 응답자의 3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친척, 친구, 동료(28.8%), 민간 직업알선기관(15.2%), 공공 직업알선기관(12.1%), 학교, 학원(12.1%)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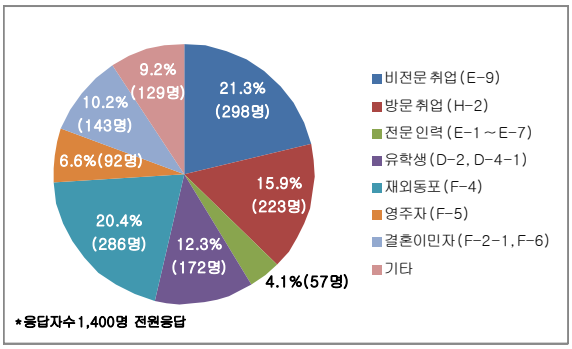
[그림 4-7] 고용계약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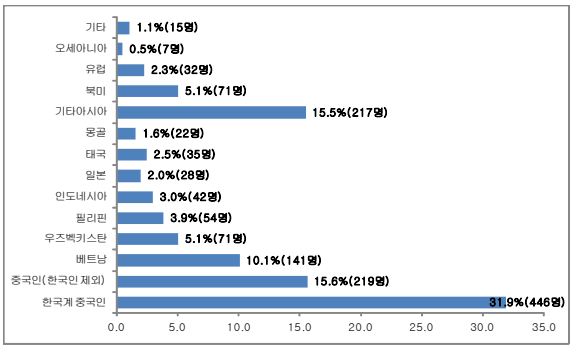
[그림 4-8] 구직경로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으로는 비전문 취업(E-9)이 전체 응답자의 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재외동포(F-4)(20.4%), 방문취업(H-2)(15.9%), 유학생(D-2, D-4-1)(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국적으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응답자의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국인(15.6%), 기타 아시아(15.5%), 베트남(10.1%), 우즈벡키스탄(5.1%), 북미(5.1%)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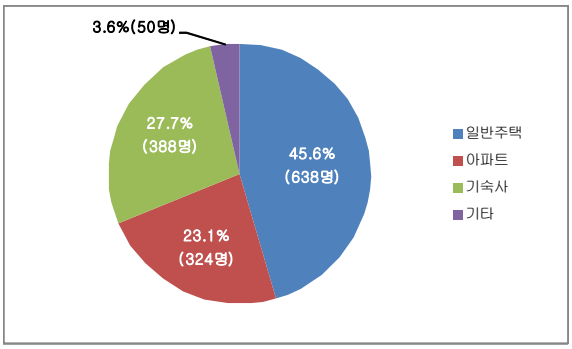
[그림 4-9] 체류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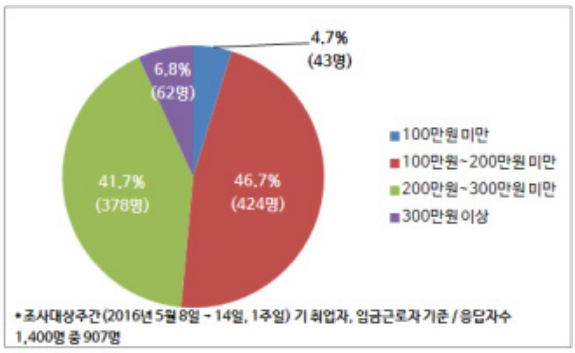
[그림 4-10] 국적분류

○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거처로는 일반주택이 전체 응답자의 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숙사(27.7%), 아파트(23.1%), 기타(3.6%)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으로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200만원~300만원 미만(41.7%), 300만원 이상(6.8%), 100만원 미만(4.7%)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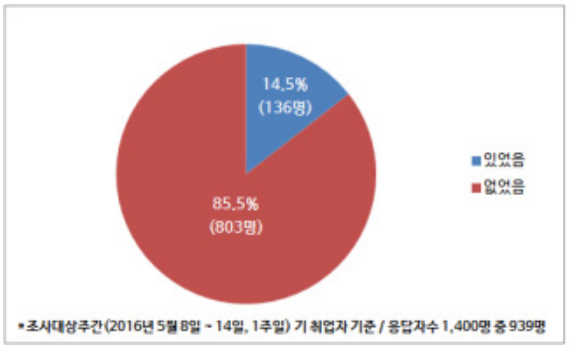
[그림 4-11] 거처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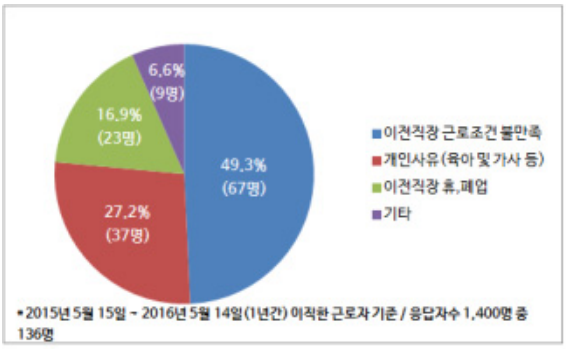
[그림 4-12] 월평균 임금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변경 여부로는‘없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85.5%인 반면, 14.5%는‘있었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하여 이직이유로는 이전직장 근로조건 불만족이 전체 응답자의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개인사유(육아 및 가사 등)(27.2%), 이전직장 휴폐업(16.9%), 기타(6.6%)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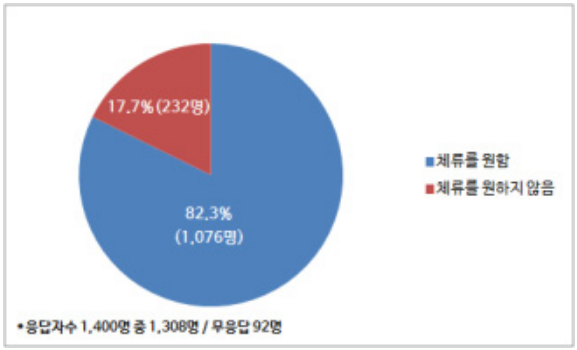
[그림 4-13] 직장변경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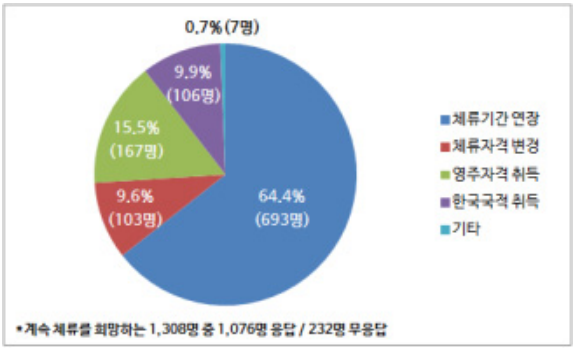
[그림 4-14] 이직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여부로는‘계속체류를 원함’이 전체 응답자의 82.3%인 반면 ‘체류를 원치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7%로 나타남

○ 관련하여 체류방법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이 전체 응답자의 6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영주자격 취득(15.5%), 한국국적 취득(9.9%), 체류자격 변경(9.6%)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5] 계속체류여부



[그림 4-16] 계속체류방법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수요측면

1) 외국인 고용사업장 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채용계획 및 방법, 만족도,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17년 8월 말 ~ 9월 초(약 2주간)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고용허가제)
- 조사지역 : 도내 전역(제조업이 밀접한 천안·아산 비중을 높게 설정)
- 조사업체 : 208개소

○ 조사항목

- 기본사항(업종, 소재지, 회사명 등), 채용 관련 사유, 계획, 만족도, 이유, 애로사항, 고용정책수요, 외국인 근로자 특성사항 등 총 15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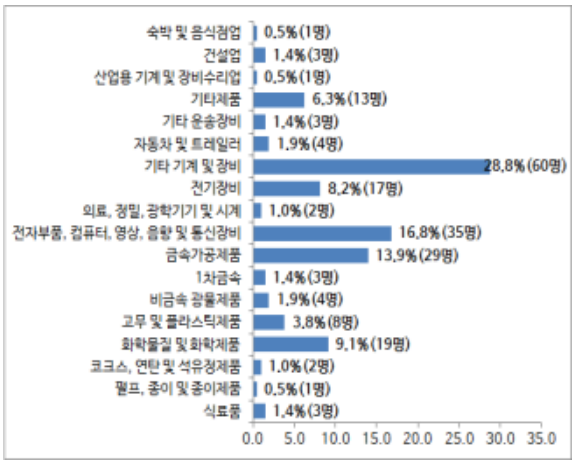
○ 조사체계

-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 고용한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장 관련인을 직접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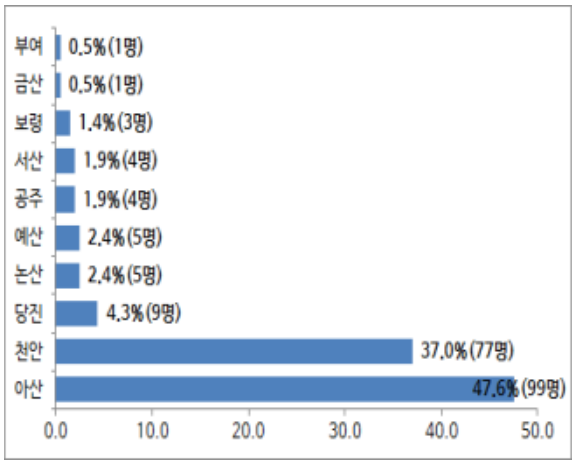
2) 표본특성

○ 설문대상인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208개소의 주요 영위업종 중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의 비중이 전체 대비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16.8%), 금속가공제품(13.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역으로는 아산이 전체 대비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천안(37.0%), 당진(4.3%)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7] 사업장 영위업종



[그림 4-18] 사업장 소재지역

3)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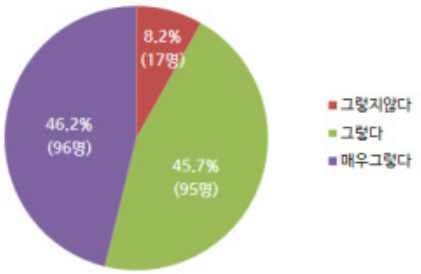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용사유로 첫째, 국내인력의 구인란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91.9%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8.2%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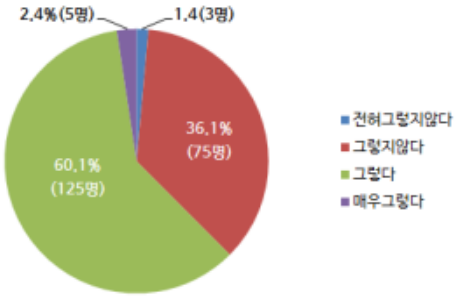
- 둘째, 저렴한 인건비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2.5%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7.5%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내국인에 비해 낮은 이직률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59.1%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0.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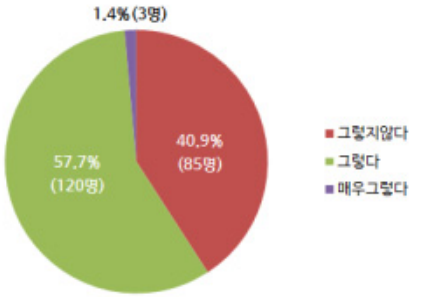
- 끝으로, 노무관리의 용이성에 대해'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8.6%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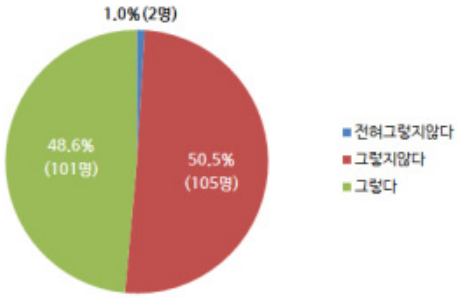
국내 인력수급의 어려움



저렴한 인건비



내국인에 비해 낮은 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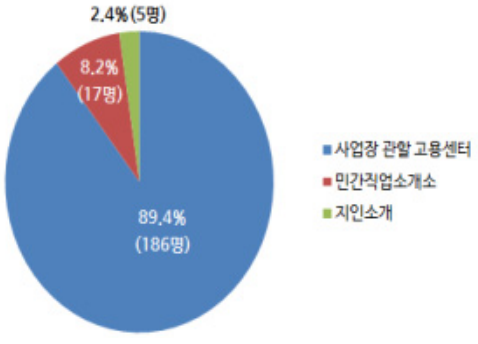


노무관리의 용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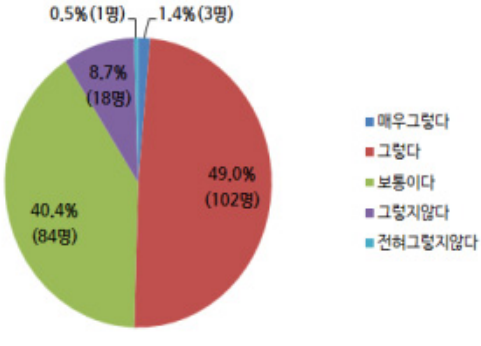
[그림 4-19] 고용사유

○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민간직업소개소(8.2%), 지인소개(2.4%)등의 순임

- 채용만족도에 대해서는'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50.4%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9.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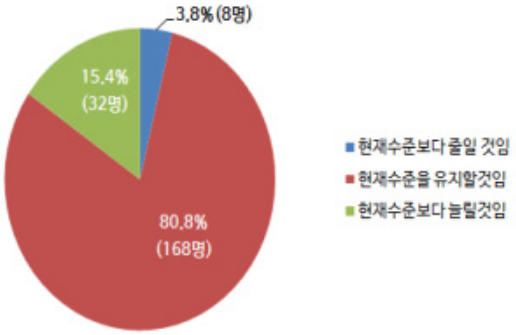


[그림 4-20] 채용방법



[그림 4-21] 채용만족도

○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서는'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현재 수준보다 늘릴 것'(15.4%),'현재 수준보다 줄일 것'(3.8%)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2] 채용계획

○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상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애로사항으로 첫째, 인력관리의 어려움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3.9%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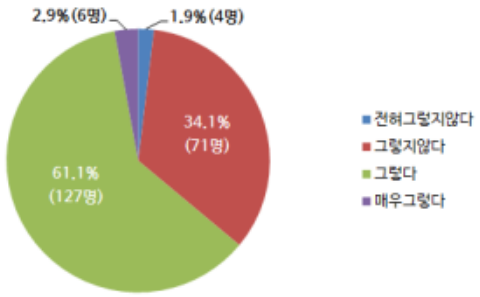
- 둘째, 높은 이직률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0.9%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9.1%로 나타남

- 셋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3.0%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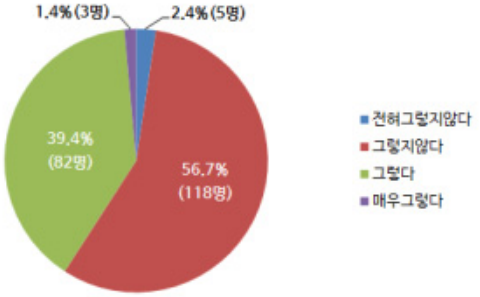
- 넷째, 근로태도 불량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22.1%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7.9%로 나타남

- 다섯째, 낮은 숙련도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51.4%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8.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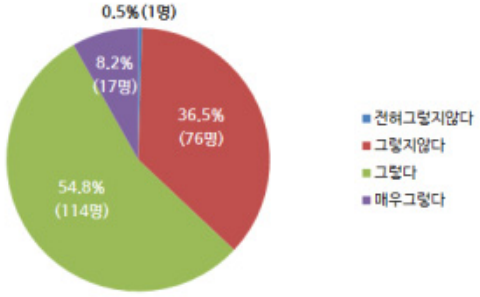
- 여섯째, 낮은 생산성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1.3%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8.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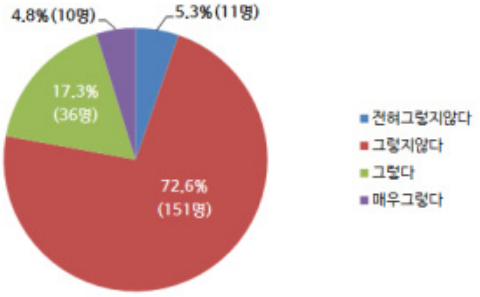
인력관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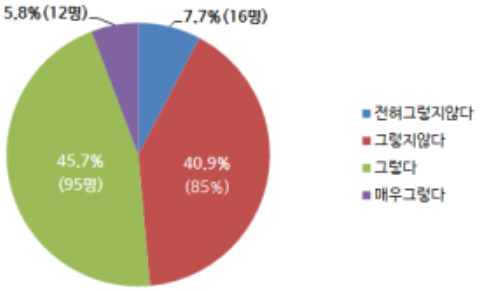
높은 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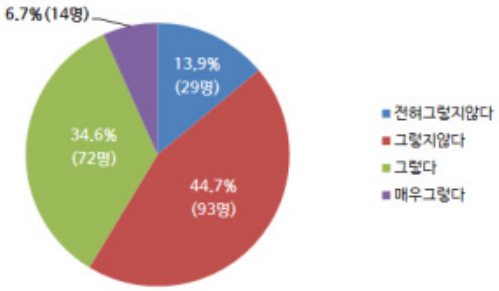
의사소통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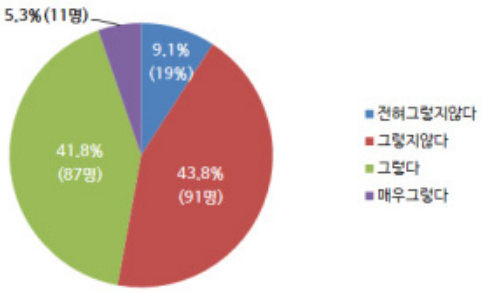
근로태도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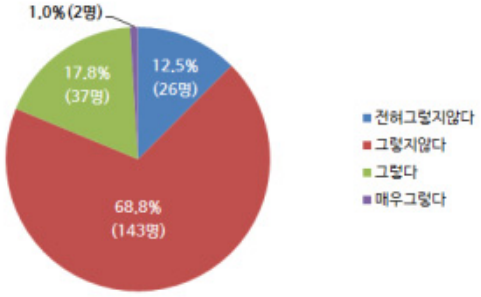
낮은 숙련도



낮은 생산성



애사심 취약



국내 근로자와의 마찰

[그림 4-23] 사용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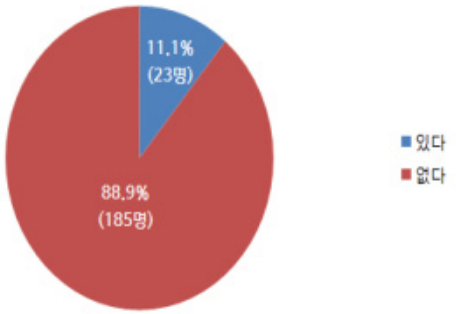
- 일곱째, 애사심 취약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7.1%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2.9%로 나타남

- 끝으로, 국내 근로자와의 마찰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18.8%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8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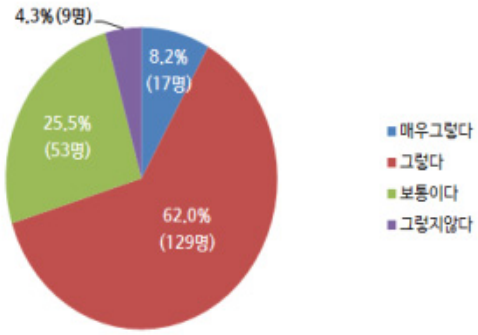
○ 불법취업자 고용의향에 대해서는'있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11.1%로 나타난 반면,'없다'라는 응답은 88.9%로 나타남

- 불법취업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70.2%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나타남

- 한편, 불법취업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는 각종 범죄문제에 대한 우려(법의 규제 부족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권 문제 등), 국가나 지역 이미지의 훼손,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그림 4-24] 불법취업자 고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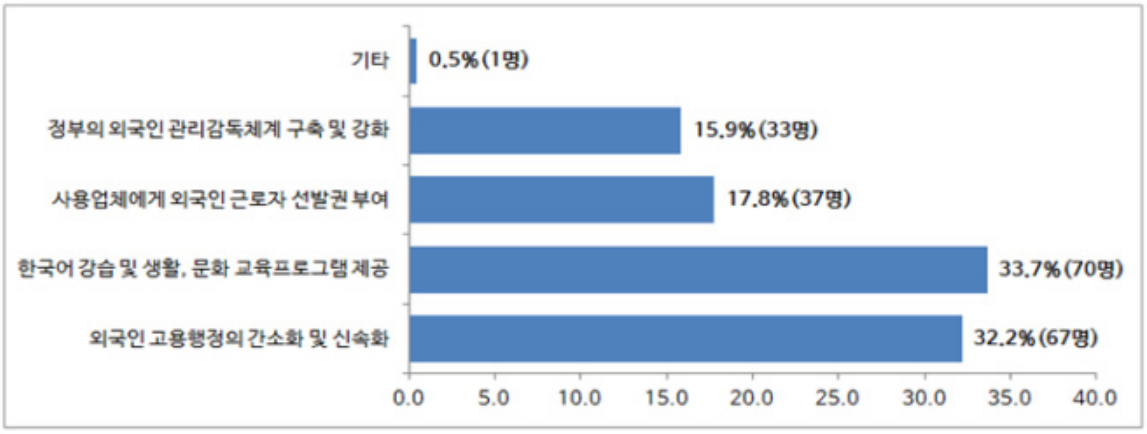
[그림 4-25] 불법취업의 사회·경제적 인식

○ 불법취업자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근로자신분으로의 외국인력 도입확대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관리감독강화(21.6%), 불법취업자 소개기관처벌(19.7%), 사용업체 및 불법취업자 처벌강화(17.3%)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어 강습 및 생활, 문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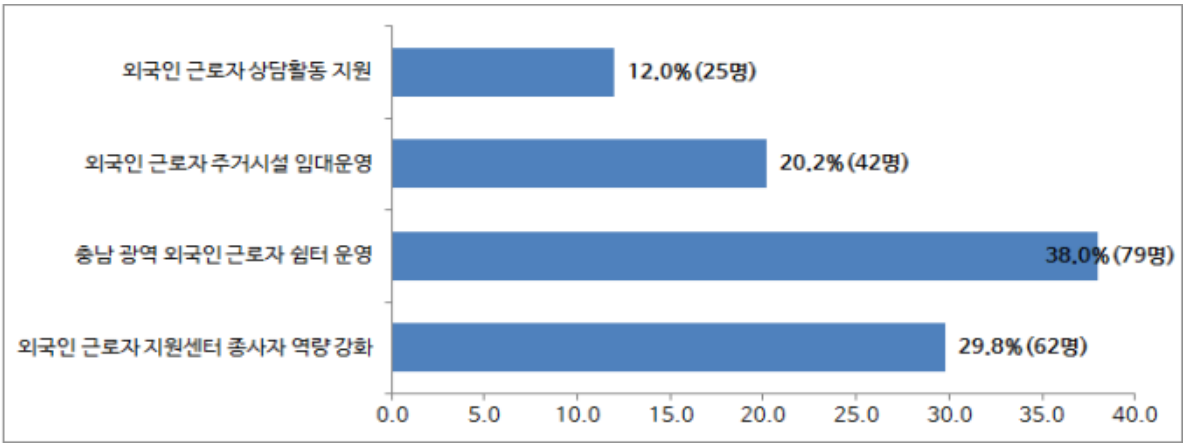
-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 및 신속화(32.2%), 사용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선발권 부요(17.8%), 정부의 외국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강화(15.9%)등의 순임



[그림 4-26] 현행 고용정책 개선사항

○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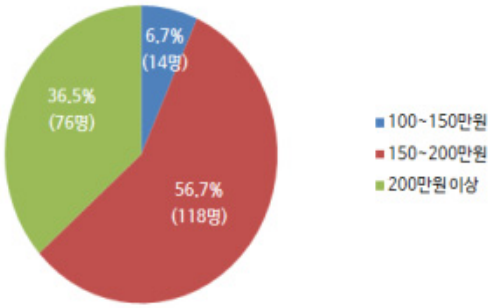
-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29.8%),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임대운영(20.2%),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12.0%)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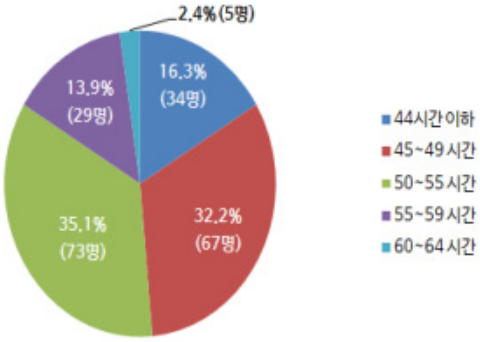
[그림 4-27] 충남도 고용정책 중요도

○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150~200만원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36.5%), 100~150만원(6.7%)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50시간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45~49시간(32.2%), 44시간 이하(16.3%), 55~59시간(13.9%), 60~64시간(2.4%)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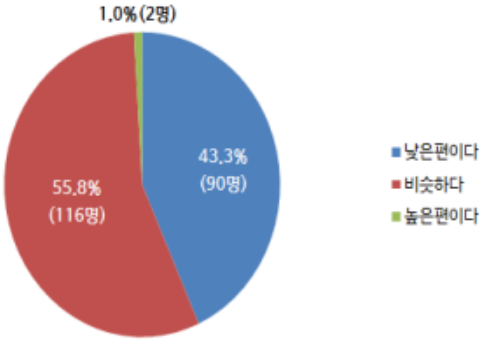


[그림 4-28]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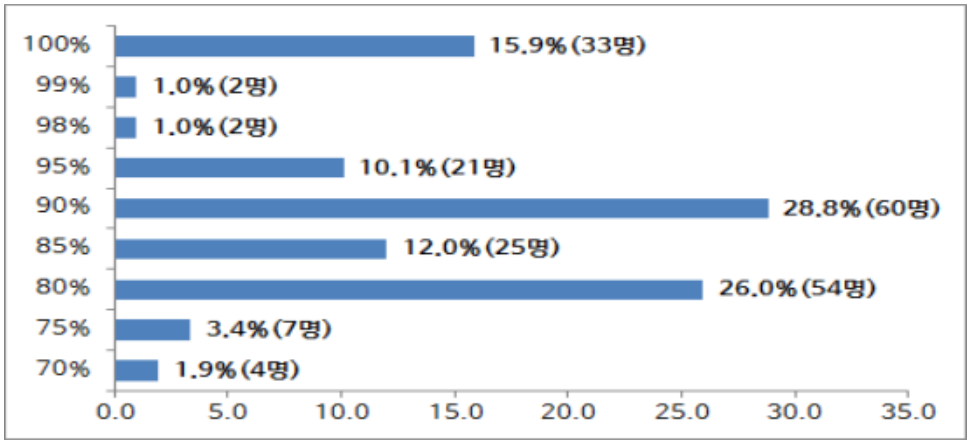
[그림 4-29] 주당 평균근로시간

○ 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한 외국인 근로자의 총 고용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낮은 편이다'(46.3%),'높은 편이다'(1.0%)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0] 총 고용비용

○ 끝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에 대해서는 내국인의'90% 수준'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80%수준'(26.0%),'100%수준'(15.9%)등의 순임



[그림 4-31]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도출

1. 정책적 시사점

○ 2015년 현재, 전국대비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제조업 집적지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권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그러나 `13~`15년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 증가율이 시단위(11.7%)보다는 군단위(14.1%)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남

- 체류자격별로는 일반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취업(E-9)]와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H-2)]가 취업 가능한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고용허가제 사업장 외국인 평균고용 규모는 3.7명으로 전국 평균 3.3명을 상회하는 수준임

-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순이며, 총 13개 국적(대륙별 및 기타로 집계된 경우, 국적을 알 수 없음)의 외국인력이 유입됨

○ 외국인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와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만, 자체조사는 충남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반면, 외국인 고용조사는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을 대상으로 한 탓에 후자의 경우,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됨

○ 수요측면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대부분은 국내인력의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력의 총 고용비용이 내국인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 절감 보다는 구인란 그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임

- 한편, 응답업체 대부분이 현재 외국인력 고용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는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지역으로 분류되며, 업체들의 상기 채용계획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또한 도내 외국인력의 숙련도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낮다'라고 응답함에 따라 향후 고숙련 외국인력과 관련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외국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으나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채용 만족도 역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한편, 평균임금은 150~200만원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업체 대부분 사업장내 외국인력과 국내인력간의 마찰문제는 크지 않으나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불법취업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리·감독 및 처벌보다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주된 채용경로로는 관할 고용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직업소개소, 지인 등)은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고용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신속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사용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을 부여하는 정책수요도 상당함

- 한편, 충남 지역단위 고용정책 중'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도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공급측면에서 2016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가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력의 종사업종 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높으며, 대부분 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 관련 업무비중이 월등히 높음

- 근속기간과 고용계약기간은 모두 1~2년 미만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향후에도 계속체류를 희망하고 있음

-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임시, 일용근로자에 비해 월등하며, 구직 경로는 공공직업알선기관 보다는 대중매체와 자체 인적네트워크(친척, 지인, 동료 등)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사업장의 규모는 대부분 50인 이하로 나타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적별로는 중국인(한국계 포함)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향후에도 계속체류를 희망하고 있음

2. 향후 과제

○ 첫째, 국가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축 필요

- 실례로 외국인력과 관련한 이용 가능한 통계는 법무부, 행안부, 통계청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행안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파악이나 효율적 관리를 주 목적으로 관련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는 전국을 7개 광역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다만, 2016년 국가단위 외국인 고용조사 당시 지자체로는 유이하게 파주시와 아산시만 통계청에 조사비용을 부담하여 자체 외국인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따라서 국가차원의 통계정비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향후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함

○ 둘째, 미숙련 인력정책의 경우, 공급 주도적 제도(supply driven system)중심이든 또는 수요 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중심이든 사례조사 대상 7개국 모두에서 취업업종과 쿼터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는 내국민 고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분야에 적정 미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셋째, 불법취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함

- 불법취업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으나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차원에서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에 대한 현실 적합한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우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므로 내외국인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함

○ 넷째, 현행 정부주도의 고용정책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한국어 강습 및 생활·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과 더불어 외국인력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종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능 및 기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

○ 다음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현재, 도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소업체의 만성화된 인력 수급란은 내국인력의 중소업체 기피가 주된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 다시 말해, 도내 청년계층의 구직란과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대체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존재가 명확치 않으므로 산업계가 당면한 구인란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가치는 지속될 것임

- 따라서 내국인을 도내 중소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사업이나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구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충남도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2015년 현재,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로 구별된 7,388명을 논외로 치더라도 총 13개국으로 다양함

- 관련하여 외국인력의 상당수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인력지원센터 내 상담지원 인력의 경우, 다양한 국적의 피상담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력충원이 필요함

- 또한 도내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제조업이 집적된 서북부 지역 중 서산을 제외한 천안, 아산, 당진과 서천지역에 총 4개소가 기 개소하였거나 예정 중임

- 따라서 외국인 인력수요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5개 시군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한편, 현재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은'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3.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 노동시장과 고용 등에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득이 용이치 않아 계량적 분석은 물론 그 실태조차 제대로 규명하는데 한계를 노정함

- 실제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는 전국을 7개 광역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충남도 단위는 물론 시군단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외국인 고용조사 역시 비용상의 한계로 공급측면의 고용실태조사는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함

- 수요측면의 설문조사 역시 표본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고용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탓에 농·어촌 지역 및 서비스업종을 간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짐

○ 상기한 제 문제로 인해 제시된 정책과제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지역단위 통계구축 완비 및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적정규모의 고용실태조사를 전제로 지역차원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량·정성적 분석이 필요함

- 나아가 이를 기초로 지역차원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함

【참고문헌】

강수돌(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2016), 울산 외국인력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유길상 외(2004),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외(2004),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이규용(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20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2007),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2011),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2007),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2017), 경제사회적 편익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향, 월간 노동리뷰 2017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박성재(2011), 외국인력 구용구조와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2014), 숙련기능 외국인력 활용방안 연구.
이상돈(2017),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진화(2003), 중장기 외국인력 적정수요 전망(제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2008),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수급모델 개발 및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최경수(2012),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경제학연구 제61집 제3호.
최영기 외(2009),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제학회(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유치정책 방향.
한국노동연구원(1995), 외국인력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사관계학회(2011), 외국인력 근로실태 및 수요조사.
한국이민학회(2008), 전문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한국이민학회(2012),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한성대학교(2010), 외국인력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현대경제연구원(2015), 외국인력 도입 노동시장테스트 연구.

지정토론

☞ **청년 및 고령화 통계와 충남 지속가능 발전에의 시사점** …… 97
김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충남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 103
김우영(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107
-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
박준형(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 **충남의 청년실업과 일자리정책** …… 113
김현철(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노사협력팀장)

청년 및 고령화 통계와 충남 지속가능 발전에의 시사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김 재 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실업, 고령화, 이민 문제

UN 인구통계(Population Prospects, 2015)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인구수가 2010년 5.3억명에서 2020년 7.1억명으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약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 전망 변화는 산업구조와 소득,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이 국가경제와 세계 무역의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1]이다.

우리나라도 2014년 전국 평균 중위연령(median age)이 40세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고[2] UN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52.6세로 일본과 동일하고 독일을 넘어선 세계 최대 초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3]가 진행되면서도 특이하게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등장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 개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지역별 노년부양비와 고령화 지수의 불평등도 변동요인과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다.[4]

---

1) 우리나라 산업계가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 비즈니스(수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무역의 향후 10년, 2014, Trade Focus Vol. 11, No. 4,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 2010년 기준 일본은 44.7세, 독일은 44.3세로 선진국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진행된 국가들로 손꼽힌다. 그 뒤로 스웨덴, 스위스 등이 고령화 선두국가이며, 프랑스와 영국 등은 2010년 기준 39.8세로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 미국은 2010년 기준 중위연령이 36.9세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그러나 2040년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52.6세로 전망되어 일본과 동일한 초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예측(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3) 고령화의 실태는 총인구 중에서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할 수 있는데, 총인구 중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부르는데, 한국은 2000년에 노년인구 비율이 7.2%가 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통계청의 2010년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중위가정하에서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4) 이헌창 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의 분석과 정책과제, 2012, 보건사회연구원

[표 1. 시도별 중위연령 추계]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전 국	31.8	34.8	37.9	40.8	41.9	43.4	45.9	48.5	50.8	52.6
서 울	31.3	34.1	37.3	40.1	41.0	42.4	44.8	47.3	49.3	51.1
부 산	32.4	36.3	40.0	43.3	44.6	46.5	49.2	51.6	54.0	56.1
대 구	31.2	34.6	38.1	41.5	42.8	44.5	47.2	49.7	52.1	53.8
인 천	31.1	34.0	37.0	39.7	40.7	42.1	44.7	47.2	49.3	51.1
광 주	29.1	32.0	35.2	38.3	39.5	41.2	43.8	46.1	47.7	49.4
대 전	29.9	32.8	35.6	38.4	39.6	41.1	43.7	45.9	47.8	49.7
울 산	30.3	33.7	36.9	39.6	40.6	42.2	44.8	47.2	48.8	50.1
세 종	-	-	-	37.0	37.4	39.0	41.5	43.5	45.4	47.6
경 기	31.0	33.6	36.5	39.1	40.0	41.4	43.8	46.0	47.9	49.7
강 원	33.8	37.3	40.6	44.0	45.3	47.3	50.4	53.1	55.6	58.0
충 북	32.3	35.7	38.7	41.8	43.1	44.7	47.3	49.9	52.6	54.8
충 남	34.0(15)	36.5(13)	38.6(11)	41.4(8)	42.6(8)	44.2(8)	46.7(8)	49.5(8)	52.3(9)	54.8(10)
전 북	33.2	36.9	40.2	43.5	44.7	46.5	49.3	51.8	54.3	56.7
전 남	35.5	39.8	43.3	46.3	47.4	49.2	52.1	54.6	57.0	59.4
경 북	34.0	37.6	40.9	44.3	45.7	47.8	51.0	53.8	56.3	58.9
경 남	32.6	35.8	38.6	41.8	43.1	44.9	47.7	50.4	53.1	55.2
제 주	31.2	34.5	38.0	40.9	42.1	43.8	46.4	49.1	51.6	53.6

자료: KOSIS, 2017, 시도별 인구추계 자료(시도별 중위연령)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 별 연령대별 전출입 통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민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민자 현황은 2000년대 국제결혼 급증으로 이민배경 자녀수가 2015년 2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이민자 유입 활용 합리화 정책이 체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민자 유입의 비용-편익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5]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 단순 저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 및 지역성장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은 이민수요에 대한 전략, 출산률 제고, 우수 전문인력 유입과 신산업 육성, 동포 이민자 정책 등 종합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OECD 주요국들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경기적 영향이나 노동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특히 지역의 기술/인력 특성을 반영한 인력공급정책을

5) 이규용, 2017.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번송 노인문제연구소,

도입한 국가, 사회통합정책 측면에서 내국인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정책(이민비자이든 비이민비자이든 적응력-노동력이 입증된 이민자에게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식 선호 등) 등은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 창업성장론과 발전방향

앞서 본고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입 문제와 동시에 청년실업문제를 언급하였다. 청년취업 문제는 이미 혁신주도형 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규모의 경제(효율)성장 시대와는 다른 정책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국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들도 대기업과 공공기관[7]만을 일할 대상으로 모색하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채용 정책에서 신규직원 이외에 전문가와 경력직원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단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소벤처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혁신주도형 성장정책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국가들은 그럼 어떻게 진입장벽을 돌파했을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수식 1. 생산요소 동인 국가 성장단계별 모형]

$$Y = A(K, L, E, N) \Rightarrow Y = A(F(K, L), E, N) \Rightarrow Y = F(A(Rand\ D), F(K, L), E(R), N)$$

위 수식과 같이 경제성장은 과거의 유한한 생산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효율적인 규모의 성장단계를 지나 혁신주도형 성장단계의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지수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진입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 확산과 창업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활동이 발전 동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 즉 혁신주도형 단계의 국가 성장 동력은 창업(start-up)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 제도는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교육정책과 창업기업 육성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다[9].

---

6) 이민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고령화는 양(+)의 효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실업률은 음(-)의 관계를 보임, 이규용, 2017.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번송 노인문제연구소,

7) 물론 아직까지 OECD 통계에 의하면 국가 중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혁신주도형 성장국면에 직면한 당시 선진국들은 공공기관 일자리가 이미 확보한 경우(유럽)와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창업수요 정책)을 시도한 국가들로 실업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GEM Global Report, 2013

9) 이윤준 외,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2012, 정책연구, STEPI.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율은 9.8% (전체 실업자의 43%, 약 43만여명)에 달하고 있다[10](2016, 통계청). 공공기관 취업과 중소벤처기업 취업 정책지원으로 실업 문제의 단기적 해법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벤처창업국을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방향은 선진 사례에 비춰볼 때 틀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 가능하나, 과연 그 내용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기반은 수도권에 집중[11]되어 있고 지역의 창업기반은 이제 초기 단계로 많은 기반마련과 투자가 요구된다. 물론 여기에는 인구이동과 고령화, 지역균형성장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는 창업분야 정부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이 창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잠재력부문이 높을수록 창업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12] 따라서 지역 주도의 창업기반 교육(청년창업 준비자 양성), 인프라 등의 정책개발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하는데 더욱 중요[13]하며, 나아가 청년실업과 혁신주도형 성장국가로 본격 진입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충남에의 시사점

충청남도의 경우는 경기도, 제주도, 세종시 다음으로 2002년 이후 순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25~29세 사이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며 장점이다. 그러나 이들 계층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여건은 제대로 갖춰놓고 있는지 의문이다.[14]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창업성장 기반은 인프라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연구[15]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기업가정신 역량지수[16]는 서울을 제외하고

10) 통계청(2016), 전체실업률은 2016년 기준 3.6%

11) 전체창업기업의 45.6%가 수도권에 집중(2015년)

12)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비교, 2016, STEPI.

13) 김진수, 지역창업생태계와 대학창업의 역할과 과제, 2017, 창업활성화 포럼, 한국창업학회.

14) 김진수, 지역창업생태계와 대학창업의 역할과 과제, 2017, 창업활성화 포럼, 한국창업학회.

15)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비교, 2016, STEPI.

16) 한국형 지역별 기업가정신 역량지수 구성은 인식(개인적 태도, 사회적 문화, 정책체감도), 잠재력(정부기관지원, 민간투자기관, 청년창업 준비자), 그리고 성과지표(신규 기업가 비율, 기회형 창업비율, 창업밀도 등)으로 구성, STEPI. 2016

전국 최고수준이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25~29세 청년 전입율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인구도 2006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창업성장 잠재역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충남지역은 국가 주력산업을 주도해 왔으며, 제조업 위주, 대기업 주도의 경제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창업 및 서비스 산업이 부진하다.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R&D 투자가 대기업 산업군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창업 및 중소벤처의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 점[17]은 정책지원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창업을 통한 혁신 성과 창출의 근본 요인은 기업가 정신이 투영된 창업가 양성(교육), 유효소비시장(혁신재화 및 서비스 수요시장 창출), 그리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투자[18]로 정리된다. 충청남도는 청년창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4차산업 시대 기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국면에 있다. 지역차원의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교육, 기반구축, R&D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김재준, 2014, 충남 R&D 성과분석보고서: 지역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론, 충남테크노파크.

김진수, 지역창업생태계와 대학창업의 역할과 과제, 2017, 창업활성화 포럼, 한국창업학회.

박성빈 외, 201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결과를 중심으로, issue paper series No. 2013-17. 한국은행.

이규용, 2017.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번송 노인문제연구소,

이윤준 외,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2012, 정책연구, STEPI.

이헌창 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의 분석과 정책과제, 2012,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의 향후 10년, 2014, Trade Focus Vol. 11, No. 4, 국제무역연구원.

GEM Global Report, 2013

Schumpeter, J.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Bro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2015, UN.

17) 김재준, 2014, 충남 R&D 성과분석보고서: 지역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론, 충남테크노파크

18) 국민계정에서 연구개발 부문이 중간재가 아닌 부가가치로 편재된 것은 큰 흐름의 변화였다.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술에 투자하고 이것이 성장의 핵심요인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흐름으로 편제되었다. 박성빈 외, 201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결과를 중심으로, issue paper series No. 2013-17. 한국은행

충남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 우 영

○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임. 2000년 20-29세의 실업률은 7.5%이었던 것이 2016년 9.8%로 증가하였고, 충남의 경우에도 동기간에 실업률은 6.6%에서 8.2%로 증가하였음.

○ 청년들의 취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낮은 경제성장률", "급속한 자동화 및 기술 발전", "학력-일자리 미스매치" 등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한편, 제조업의 불황으로 인해 퇴출되고 있는 인력이 자영업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 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앞으로 청년 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임.

○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도 국내 일자리 기회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2012년 현재 15세 이상 외국인 수는 약 114만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43만명으로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대전·충청권의 외국인 수는 그 보다 훨씬 더 빠른 연평균 7.2% 증가하고 있음. (신동호, 2017)

○ 2015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충남이 약 35천명으로 전국의 약 6%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3년동안 연 11%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 8%를 상회하고 있음.

○ 2015년 현재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와 충남으로 각각 4.59%와 4.57%임. 따라서 충남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사명철, 2017).

○ 충남의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부권 지역인 공주, 부여, 금산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지역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으로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임. 최근 사명철(2017)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GRDP가 증가하지만 그 효과는 내국인 노동자의 증가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외국인의 자국으로의 송금효과인 것으로 추측.

○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임금이 감소하고 따라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임.

○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내국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상당히 상이함. 일부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이 보완관계로, 일부 연구에서는 대체관계로 나타남. 최근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능기계조립 직종과 단순노무 직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찬영, 2017)

○ 따라서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임.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 질 수 있다는 것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청년들도 더 많이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충남의 노동정책

○ 현재 충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상담,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익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꼭 필요한 정책임.

○ 하지만 충남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임. 충남에 적정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얼마인지? 산업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공급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와 거버넌스가 충남도내 필요함. 특히 앞으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본다면 가급적 빨리 적정 외국인 노동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하고 있는데 처음 입국 시 3년을 허가받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며, 성실근로자 선정 시 4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해졌음 (사명철, 2017).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내국인 고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의 수 뿐 아니라 질을 관리하는 정책도 필요함. 지금까지의 외국인노동자는 주로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치중되어 왔음. 하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고급 외국 인력이며 이들의 수입이 경제에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 고급 외국 인력의 이주는 주로 선진국들의 이민 정책이며 내국인과의 대체효과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임. 하지만 이 역시 산업수요와 외국인력 공급에 대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수요 (인력의 수와 종류)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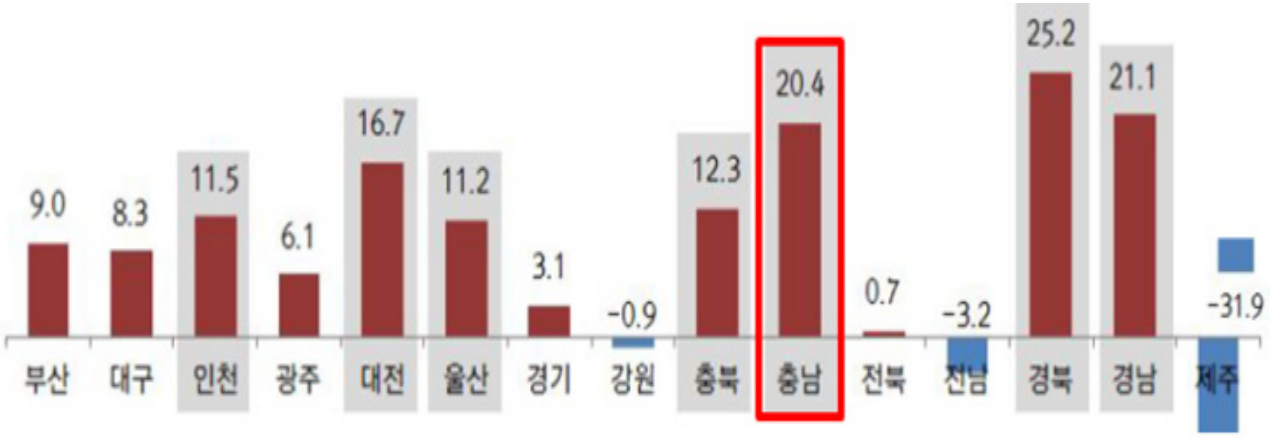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
팀장 박 준 형

❑ **충남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

○ **충남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_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발표 기준**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산업의 11개 분야 /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 중 3위**
- 기업 3,416개(3.3%), 매출액 728,630백만원(0.7%), 종사자 9,294명(1.6%)



○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문화 콘텐츠 산업 전공학과 보유**

- 도내 25개 대학, 216개 학과에서 매년 10,444명 배출

○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유지되는 청년 CEO**

-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 TP,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역 대학들과 함께 2011년부터 만 39세 이하의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현재 7년차)
- 특히, 문화산업 분야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핸드메이드가 특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트렌드에 맞는 3D 프린팅 제조·교육, 드론 분야의 지속적인 창업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년 평균 69.81%의 높은 유지율을 보임**(17년 5월 기준)**

구분	문화산업 분야 창업지원 현황					성별		지원금액 (백만원)	실제 창업	'17년 현재 창업 유지율	
	ICT	핸드메이드	전문서비스	기타	합 계	남	여			유지인원	유지율
'11년	5	9	6	4	24	13	11	700	22	7	29.17%
'12년	1	8	8	3	20	11	9	44	19	6	31.58%
'13년	0	13	3	1	17	9	8	156	17	10	58.82%
'14년	0	18	7	2	27	8	19	212	21	17	80.95%
'15년	10	23	6	7	46	23	23	219	45	37	82.22%
'16년	3	18	11	4	36	16	20	218	35	34	97.14%
합 계	19	89	41	21	170	80	90	1,549	159	111	69.81%

○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한 충남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

- 2009년 천안 구도심 일원을 충남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인프라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시민 스스로 만드는 문화도시 : 다양한 문화거점 조성 및 소규모 장르 지원, 창의인재 양성 및 창작활동 지원, 선도그룹 네트워킹 등	5년간 35억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	○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 충남 문화자원의 새로운 DNA 발굴, 특화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창의인재 · 콘텐츠 · 산업의 집중 육성(디지털제조, 핸드메이드, 미디어 아트 등)	매년 20억
음악 창작소	○ 충남의 뮤지션 발굴 및 네트워킹, 창작 · 공연 · 엔지니어 지원 등	1차년 20억 이후 매년 5억
웹툰 창작체험관	○ 충남의 웹툰 작가 발굴 및 프로모션, 파일럿 제작 지원 등	매년 0.6억
스토리 랩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운영, 충남 창작 스토리 · 작가 발굴 및 지원	매년 1.45억

❑ 문화 콘텐츠 ·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안 배경

○ 경제 저성장, 청년실업,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문제점 발생 등은 그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사안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

-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들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파급력 있는 성과가 창출되지는 못함

► 부정적 측면 : 취직을 위한 단순 커리어 쌓기, 지원금의 방만 운영, 먹튀 논란 등

► 긍정적 측면 : 지역에서 노력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출현,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활동 참여 증가, 지역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

➡ 사업들 대부분이 창업 공간·활동비·전시-비즈 마켓 참여 지원 사업임

○ 단순 창업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사회현상과 흐름을 고려해 청년 창업의 패러다임을 전환려는 노력이 필요

- 주요 트렌드와 이슈 : 4차 산업혁명, 메이커 운동, 스마트, AR·VR, IoT, AI, B+ 프리미엄, **1코노미(1인 경제),** 욜로 라이프, Calm-tech(보이지 않는 배려기술), 헬스케어, **인구절벽,** 고령화, 지방소멸 등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환 가능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영역

► 4차 산업혁명 + 메이커 운동, 융복합 비즈니스 플랫폼, 스몰 비즈니스 등

➡ 기존 산업들과 연계된 고용창출은 유지하되, 융합이 용이한 문화 콘텐츠·서비스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충남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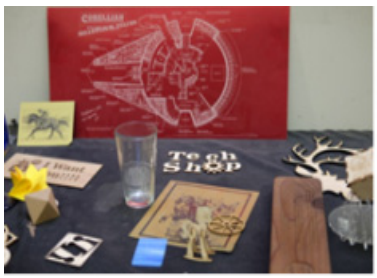
①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한 메이커 운동 도입 및 확산(창업 환경조성)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지나치게 제조업과 기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생활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영국 : 정보기술에 집중하고 있지만, 바탕은 유아들의 코딩교육에서 시작

► 미국 : 2005년 창간한 make라는 잡지와 함께 메이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 공예, 예술, 엔지니어링, 소규모 DIY, 과학 실험 등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꾸준히 늘여가고 있으며, DIY 산업과 1인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메이커들과 그들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미국 제조업의 기초가 될 것(2014. 오바마)



- 1. 충남 지역의 유휴 시설·공간들을 활용해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 공간구성 :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각 장소들의 상황에 맞게 기본시설만 조성

●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로 테크 샵·카페, 공작소, 출력소 등의 자유로운 컨셉으로 구상하며, 작업·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구성

► 도입장비 : 3D 스캐너·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아두이노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작업 도구는 필요와 성격에 맞게 도입

●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형 장비를 사용하며, 필요시 지역의 기존 시설(대학, 콘텐츠 코리아 랩 등) 활용

- 2.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

► 사용자들이 희망하거나, 공공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 수익발생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발굴하여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 3. 메이커 창업 지원

►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은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메이커의 창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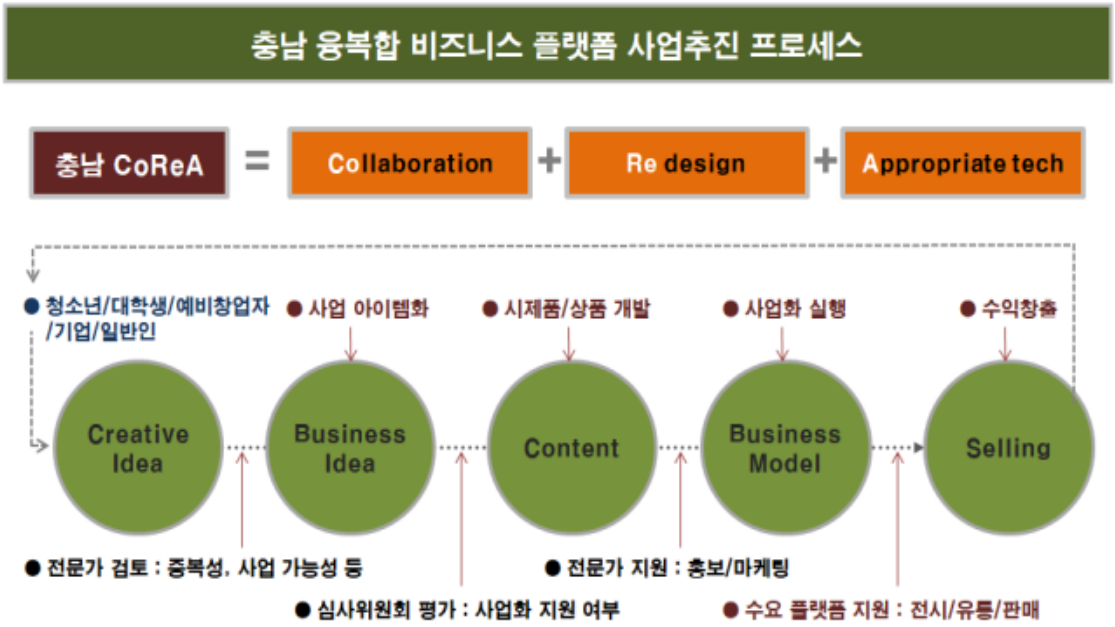
➡ 타겟 : 초·중·고·대학생을 1차 타겟으로 하고, 해당지역 주민 모두로 확대

➡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핸드메이드·DIY 장르를 특화하고, 메이커 프로젝트·창업 지원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함

② 문화 콘텐츠·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실행)

- 충남 도내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 선도형 융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충남의 산·학·연·관과 연계해 문화벨트화 추진

► 창의인재의 상상력을 융복합 문화콘텐츠로 개발·산업화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신성장 동력 기틀 마련



- 3대 전략 9개 중점 추진과제

전략분야	중점추진과제	주요내용
Collaboration (연계/융합)	① 창의 클라우드	- 산업화가 가능한 타산업/장르간 융합 프로젝트 지원 사업 - **Project 31 :** 산·학·연·관 협업 프로젝트 지원
	② 창의 브릿지	- Art & Technology 분야의 미디어 아트 전문가와 콘텐츠 제작 지원 - **Rookie 31 :** 국내 작가들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프로젝트와 연계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함께 매년 1건씩 협업 프로젝트 진행 중**
	③ 창의 페스타	- 창조경제와 관련한 융합 콘텐츠·사람과의 교류전 - **Exhibit 31 :** 31개의 테마를 소재로 한 창조·융합 페스티발
Re design (개선/만듦)	④ 창작 챌린지	- 개선이 필요한 충남의 문화자원과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재창작 - **Re design 31 :** 개선을 통해 산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재창작 지원
	⑤ 창작 워크룸	- 충남의 문화자원, 환경, 버려지는 것들의 재생 및 상품화 - **Up cycle 31 :** 문화자원, 환경, 에너지 분야의 재생 프로젝트
	⑥ 창작 스팟	- 충남의 4대 권역별로 창작 스팟을 조성하여 일반인들과 어울림 구현 - **Good zone 4 :** 기초단체와 연계해 창작이 가능한 핫 스팟 조성
Appropriate tech (찾기/적용)	⑦ 공유 파인딩	- 국내·외 적정기술이 필요한 장소, 적용 가능한 아이템과 기술 찾기 - **Discovery 60 :** 적정기술 전문·보유자로 구성된 발굴단 운영
	⑧ 공유 메이커	- 공유 파인딩에서 선별된 아이템에 대한 적정기술 연구 및 개발 - **Create 30 :** 시제품 개발, 테스트 지원, 산업화 가능여부 검토
	⑨ 공유 팩토리	- 공유 메이커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기 - **Apply 30 :** 적정기술 결과품 생산, 현장 설치 및 적용, 결과 확산

③ 스몰·착한 비즈니스 도입과 실험

- 일본 후지무라 야스유키의 지방에서 일자리 만들기 / 3만엔 비즈니스

► **후지무라 야스유키 :** 비 전자 공방 대표, 일본대학 공학부 석좌교수로,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학원'을 운영하며 스몰 비즈니스 가치와 풍요 방식을 전파

► **3만엔 비즈니스 :** 지방에 일이 없으니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면 더 일이 없어지는 악순환을 끊고자, 후지무라 교수가 실험해 성공한 사례

- **<u>지역에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창출해 2일 만에 3만엔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를 누리거나,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u>**
- 규칙 : 이웃과 사회가 행복한 일 찾기, 착한 사람들이 구매할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두기, 소비가 적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 부업이 아닌 겸업을 하라, 한달에 3만엔 넘게 이익이 남는 사업은 다른 사람과 이익을 공유, 감동적인 상품 만들기, 면대면(face to face) 사업 추구, 대출을 받지 않기, 다 함께 만들기,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서로 생각을 공유할 것(내 아이디어를 훔쳐 가서 서로 공유하라)

► 후지무라 교수는 1,500개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며, 제자들은 800개 이상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냄

- 왕겨 단열 판넬, 유기농 장터, 쇼핑 대행 서비스, 자동차 배터리 재충전, 빗물 비즈니스(빗물로 화장실 물을 내리게 하는 기계) 등

► **비 전자 공방 :** 1만평 규모의 땅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거나 일을 하면 됨, 연간 3천명 이상이 방문 / 10년간 650명 제자 배출

❑ **충남도의 환경에 맞게 3만엔 비즈니스를 적용**

❍ **충남도·각 기초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폐교 등을 파악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단체 1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이후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면 충남 전역으로 확대**

- 대상 : 충남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층(만 39세 이하)
- 비즈니스 장르 : 수익 발생이 가능한 모든 장르(청년 농사꾼, 청년 발명가, 농가 레스토랑·카페, 동물농장, 푸드 스타일리스트, 공방, 순수예술 활동 등)

충남의 청년실업과 일자리정책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노사협력팀

팀장 김현철

MEMO

MEMO

MEMO